

# 제417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7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우주항공청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정된 안건

-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우주항공청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무회의 대참으로 인하여 오전 중 과기부1차관의 이석을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10시03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는 등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였고 10월 달탐사 2단계 사업의 예타 통과 등 우주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제도 도입,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확대 등 연구자 입장에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에 투자 혁신을 위해 차세대 기술 분야의 대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 예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다자간 협력체, 양자회담 등을 계기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법률 제정·개정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우주항공 특

별법 법률안을 제정해 주셔서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한 해 동안 총지출 기준으로 18조 9382억 원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세입은 11조 9101억 원으로 일반회계 377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913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11조 44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액은 16조 2005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5648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1조 5499억 원, 우정사업특별회계 6조 857억 원입니다. 이는 예산 현액 16조 5094억 원 대비 98.1%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액은 2조 7377억 원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1110억 원, 원자력기금 2078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1235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1조 2954억 원입니다. 이는 계획한 2조 7430억 원 대비 99.8%를 집행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노트북에 첨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대행은 안 나오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국무회의 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무회의 참석자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배석자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배석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장관인가요?

과기부장관님은 국무회의 참석 안 하고 오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저는 제1차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도 조성은 처장이 국무회의 배석하고 대행이 나오실 수 있었지요?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제가……

○위원장 최민희 하지 마시고요 제안설명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2023회계연도 방통위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약 100만 명의 국민들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방송산업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였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진행할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는 총 56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54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472억 원으로 예산 대비 95.7%를 집행하였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실적은 2075억 원으로 계획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한 해의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의 운영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고리 2호기를 비롯하여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업운전에 착수한 신한울 2호기와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에 대해서 선행호

기의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3·4호기에 대해서는 설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건설허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 현안과 신규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23년 8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국민 안심을 위해 방사능 감시 정점을 확대하고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 방사성핵종의 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 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셋째,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22년 완공된 울주에 이어서 한울권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을 추진하였고 한빛권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신축을 준비함으로써 광역 단위의 현장 지휘체계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방사선법 개정에 따라서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 우주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원전 주변의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등 다수의 제도개선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 세입 실적은 3320억 원으로 당초의 징수결정액 3326억 원의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 세출 실적은 4734억 원으로 총 예산현액 4557억 원 대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을 포함하여 103.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1435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1458억 원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3298억 원으로 계획현액 3099억 원 대비 106.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추가해 지난 한 해 우주 분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자적인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였고 후속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해 우주 수송 역량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2032년 독자적인 기술로 달 착륙에 도전하기 위한 달탐사 2단계 사업의 예타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였고 한미 간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채택과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우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우주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하여 3축 거점이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전조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재의 우주항공청 모습을 설계해 주신 결과 올해 1월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거쳐 5월 27일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2023회계연도의 예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산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소관 우주산업특화소프트웨어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우주산업 분야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4억 원을 집행하였고 우주항공청 소관 스페이스이노베이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존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2024년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중기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향후 사업 기간 중 예산 삭감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8억 원 중 5000만 원, 12.3%가 실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주요 검토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경상운영비가 기관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일부 기관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상운영비 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023년 기초연구 투자액은 2017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지만 그에 비해 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건비가 다른 과기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연구분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과기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 R&D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는 신뢰성이 낮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혁신본부가 주관하는 특정평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총 여덟 곳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2025년까지 신축할 계획인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센터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직에 지급되어야 할 연구수당을 비연구직종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비연구직종을 연구활동에 참여시켜 연구수당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대체토론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7분입니다. 질문, 답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장관님, PBS 제도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조인철 위원 PBS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갑자기 제가 떠오르지를 않아서 좀 설명해 주시면……

○조인철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PBS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기관의 어떤 안정성은 좀 유지됐을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으려 다니느라고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연구과제들이 2억, 3억 이 정도로 계속 파편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출연연구기관이 가져야 되는 원래의 역할에 좀 배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답변해 드릴까요?

○조인철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TBS로 들어 가지고, PBS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PBS 제도가 원래는 연구원들의 어쨌든 생산성, 뭐라 그럴까 연구능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과제들이 파편화되면서 집단연구가 좀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래서 이 PBS 제도가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기관의 역할하고 상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이 크고 대형 장기과제 위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PBS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률적으로 출연연의 어떤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각 출연연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 대신 PBS가 차지하는 것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PBS 제도를 그렇게 같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다 일일이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룹핑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출연연구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묶어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할 수 없고 대학에서도 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크고 대형과제들은 결국은 출연연구기관,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들이 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답변드릴까요?

○조인철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미 일정 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자로 NSTL이라 해서 출연연 간의 협력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미 좀 시행되고 있고요. 향후 더 늘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좀 돼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걸 위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프로젝트 그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해 보다 보니까 지방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없어서 연구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출연연구기관에서, 특히 각 지역에 내려가 있는 출연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관들이 각 기업들과 협업해서 같이 해 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게 소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생산기술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제저제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만 우리나라가 기술의 사업화 쪽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의 사업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 목적이 산업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한 5위 정도 되고 그러나 10년째 지금 성과는 정체되어 있다는 업무보고를 어제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포함해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걸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조인철 위원 바로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달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저는 길게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계획 수립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충분히 그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상당히 전 부처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인철 위원 좋습니다. 기간은 좀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연구비가 23년 대비 24년 대폭 줄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보니까 대폭 줄이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예정처나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실에서 검토한 것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지연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약이 원래 계속과제 같은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서 한 4개월 이상을 재협약하는, 협약 조정하는 과정에서 치러졌었기 때문에 집행도 상당히 지연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불용액은 한 500억 정도 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어땠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일단 지정하면 예산을 다 쓰는 게 기본 원칙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 R&D 예산의 삭감은 과학 이쪽 연구 쪽에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구 불용액을 여쭙본 건 그거예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불용액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에 줄속적으로 집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여쭙보고 싶은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조인철 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22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2분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위원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저희 여당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야당에 좀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하고 저희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가치를 떨어뜨리는 듯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단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중국 관련해서 핵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50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당연히 문제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말을 하심으로써 마치 민주당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똑같은 잣대로 얘기해 온 것처럼 느끼게끔 이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돼서 김현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물염치라는 발언까지 했는데……

1분 더 주세요, 1분밖에 안 주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더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그런 물염치라는 발언을 동료 위원에게 했는데도 아무런 사과 요구나 그것에 대해서 김현 위원에게 경고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의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회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종료를 해 버리셔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도 저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역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이 어제 저한테 물염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발언 취소를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잔인하다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취소와 사과를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한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 하셨어요? 답변할까요?

○박정훈 위원 예.

○김우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정훈 위원의 발언과 그 이후의 소란을 이 가운데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위원이 반말하셨어요. 중간에 반말하셨다고요.

○박정훈 위원 그러면 뭐 ‘당신이’ 이런 건 괜찮고요?

○김현 위원 저한테 반말했다고요.

○위원장 최민희 저는 그래서…… 김현 위원이 박정훈 위원에게 ‘당신’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김우영 위원 아니, 멀쩡히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왜 뜬금없이 또 튀어나와 가지고 방해하고……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김현 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박정훈 위원 가만히 계세요, 당사자도 아닌데.

○김현 위원 김우영 위원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공격했던 거잖아요, 반말하면서.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김우영 위원 양반이나 당신이나 그게 지칭하는 말이지.

○위원장 최민희 보세요. 김우영 위원님이나 박충권 위원님 둘 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몰염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두 분에게 공히 반말하신 것도 사과하고 그리고 김현 위원님도 몰염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김우영 위원 아니, 어제 회의가 끝났으면 어제 회의로 끝내야지. 뭘 하고 있는데 또 나와 가지고 어제 얘기를 또 하고 앉아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위원장 최민희 아니,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박정훈 위원님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회의가 끝나면 끝난 대로 끝내야지 왜 뒤끝 있게 말이지, 멀쩡히 보고받고 있고 질의 준비하고 있는데 당면하지도 않은 의사일정 가지고 말을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끼어드는 건 양쪽 다 그만하시고요. 두 분께 여쭙었습니다. 반말을 사과하시고 몰염치라는 말을……

○김현 위원 아니, 왜 몰염치를 사과해야 되는 건지……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얘기를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잠깐만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니다.

○김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왜 1분씩 위원장님이…… 저는 지금 봉변을,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안 했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안 하셨어요.

○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일단 제 의견에 대한 의견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현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아니, 염치가 없다는 말이 그게 사과해야 될 말이면 과방위 회의를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행태를 얘기했어요. 태도를 얘기하는데 지금 박정훈 위원님은 시도 때도 없이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야당 간사를 걸고 넘어지는 무슨 특이한 재주가 있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너무 그런 부분을 아주 너그럽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야당 위원들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그걸 그냥 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 고요.

박정훈 위원이 옆에 있는 김우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저께 얘기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결산 보고 끝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고춧가루 뿌리듯이 지금 저렇게 하는 행태는 제가 왜 하는지 다 압니다만 적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야당 간사가 봉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행태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몰염치가 염치가 없는 것을 몰염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야당 간사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반말하는 것, 그렇게 경우 없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전혀 상관없는 위원장의 어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들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2분 주세요, 2분.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1분입니다. 왜냐하면 2분 하셨잖아요. 1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김현 위원이 사과할 거라고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사과하면 김현 위원이 아니지요.

○김현 위원 시비하지 마시고요. 시비하지 마세요.

○박정훈 위원 그리고 몰염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현 위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중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게 몰염치예요.

○김우영 위원 아니, 지금 몇 년 지난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김현 위원 아니요, 하게 하세요.

○박정훈 위원 그런 게 몰염치라고. 사회적 약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몰염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김현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드립니다, 드립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대리기사가 직접 얘기한 게 싱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보도가 다 났습니다.

○김현 위원 TV조선 앵커입니까, 지금?

○박정훈 위원 다 이미 보도가 돼 있어요.

○김현 위원 무죄 나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다 해 가지고 보상받았는데요, 박정훈 위원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 김현 위원님.

○박정훈 위원 그게 몰염치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 국회의원증 들고 여기 이거면 다 들어간다는 게 몰염치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1분 다시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현 위원 기회를 줄 테니까 보고 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3분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3분.

○김현 위원 5분이에요, 신상발언.

○위원장 최민희 5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드릴 테니 박정훈 위원님이 1분을 다 쓰시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1분 다시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다시 1분 드리세요.

○박정훈 위원 어제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김현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몰염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몰염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라고요, 염치가 없다는 것. 자기가 잘못된 것 모르고 사회적 약자한테 그렇게 갑질해 놓고도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위세라도 되는 양 국회의원증 들고 정부청사 드나들면서 출입증 내밀면서 마음대로 드나들겠다고 하는 게 몰염치라고요.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아니, 이것은 10년 전 사건을 TV조선에 있을 때 했든지 아니면 보수 언론에 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 아니, 그렇게 싱크가 있다니까.

○김현 위원 아니, 싱크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게 지금 옆에 있는 최수진 위원한테까지 불뚝이 튼다는 사안입니다. 지금 방통위 방문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방통위 방문하는 건 저희는 명백하게 방통위 연락관에게, 협력관에게 약속을 잡고 9시 50분에 방통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차량으로 들어갈 건지 다른 방식으로 갈 건지를 의논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민원실에 보좌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의 신분증은 피감기관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라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청사 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공무원이 청사 들어갈 때 보여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리기사 사건에 관련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공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발언하지 않은

걸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고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게 앉아 가지고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무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김영한, 당시 고인이 된 작고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면서 상대 위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습니까? TV조선, 채널A 이런 종편에서 당시에 마구잡이로 공격했던 것 다 내렸어요. 알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을 바로 ‘무식’이라 그러합니다. 지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진짜 속기록을 삭제 안 하시면 두고 두고 아마 박정훈 위원은 정치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 사건으로 제가 사과하지를 았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허위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1심, 2심 무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악랄한 박근혜 정부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가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핍박했던 정부를 두둔하시는 것이 설마 아니라면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제가 두 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소송에, 지금 최수진 위원 나갔지만 저분이 논평을 내셨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서 제가 소송을 하고 있어요. 갑질, 국민의힘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논평을 냈고 당시에 이 자리에 있는 비서관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발췌된 내용을 틀어 가지고 MBC의 제3노조한테 제공해 주고 한국경제 기자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설이 있어요. 일단 소송 중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박정훈 위원님 얘기했던 대리기사 사건, 그것 종편에서 조작했잖아요, CCTV를 가지고.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 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저에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얘기한 거라면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장에 대해서 무슨 자격이 있니, 없니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런 것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던 거와 마찬가지로인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작이고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가지고 당시에 MBC에서 수도 없이 보도했고 여기 있는 방송 관계자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도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최민희 지금 답이 없으시니까 먼저 하세요.

2분 드리세요, 2분.

○노종면 위원 대리기사와 관련된 사건은 제가 그때 직접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매체 비평의 관점에서. TV조선의 영상보도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편집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을 편집하는 기법 중에 역으로 돌려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지럽고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TV조선은 백으로 돌려서 하는 영상기법까지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안을 과장·왜곡했어요. 그 점을 밝혀 둡니다.

○박정훈 위원 신상발언 5분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5분 하세요.

○김우영 위원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박정훈 위원 3분만 할게요, 그러면.

○김현 위원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건데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김우영 위원 회의가 왜 이게……

○박정훈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하세요. 5분 하세요.

○김우영 위원 하지마요, 이제.

○박정훈 위원 정리할게요. 그만하시라고.

김현 위원의 주장은 주장이에요. 대리기사 인터뷰 제가 직접 가서 했고요. 저는 당시에 TV조선에 근무하지 않았습시다.

○김현 위원 조작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작했다는 건 시인하네.

○박정훈 위원 그리고 당시에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을 조작했다고요? 저희가 뭘로 어떻게 조작을 해요?

○김현 위원 예, 조작하신 거예요. 조작하신 거라고요.

○박정훈 위원 뭘로 어떻게 조작을 하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한 것 아니잖아요, 당시에. 당시에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 불러 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김우영 위원 그 얘기 왜 지금 하나고.

○김현 위원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정훈 위원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했잖아요. 그게 잘한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김현 위원 아니……

○박충권 위원 신상발언 하고 계시잖아요.

○김우영 위원 이게 지금 십여 년 전 일하고 이거하고 뭘 상관이 있어요? 원만한 의사 일정을 해야 될 여당의 국회의원이 작심하고 나타나 가지고……

○박정훈 위원 그 폭행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판이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 결과가 아니잖아요.

○박충권 위원 저희도 신상발언 하실 때는 안 끼어들고 가만히 있었습시다.

○김현 위원 박충권 위원은 왜 끼어들어요? 당사자 둘이 얘기하는데.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만하라고요, 이제 좀.

○김현 위원 그만하세요. 대변인 아니잖아요.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왜곡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김현 위원 재판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훈 위원 부끄러움을 아시라고요. 염치를 아시라고요. 그래야 염치를 남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 아니, 할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본인이 조작에 가담했다는 거 시인한 거네요.

○박정훈 위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무죄 취지가 그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것 지금 건강부회하는 것 아니에요?

○김현 위원 아니에요. 탄소리하지 마시고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됐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공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지요.

○김현 위원 원만한 진행에 안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회법 제13장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최형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모든 위원분들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제를 하는 이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고, 지금 안건이 있고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갑자기 왜 거기서 대리기사 얘기가 튀어나오지는 모르겠고.

지금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가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스물세 차례인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과방위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조금 아까 이런 일을 국민들이 보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이런 게 반감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세요? 새벽까지 밤새워서 일하시고. 저는 이렇게 상임위가,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다들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일 때문에 수십분씩 진행이 멈춰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여기 피감기관분들은 뭐예요? 와 가지고 위원들끼리 치고 받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도 좀 자제하게 해 주시



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국회법도 읽으셨지만 과감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박정훈 의원은 오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니까? 안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인 얘기를 해 가지고 국회를, 상임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대리기사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나중에 두 분이 얘기하시든가 밖에서, 그게 뭐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법에 따라서 명확히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안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위원이 국민의힘 위원의 과거의 아픔을 들추어내시고 그에 대해서 공격해도 저는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리기사 폭행과 관련한 보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병산의 일각이고요. 저기 보면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김영한 비망록에 관련 사건이 6회 등장합니다. 이것 ‘김현 의원 폭행 건-세월호 가족 선동 조종하라’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은 이 건으로 인하여 오랜 법정 투쟁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받은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기사 폭행사건 아주 오래전 일을 끌어들어서,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의 행동도 앞으로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애초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김현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리기사 폭행사건-세월호 가족 선동 조종’, 나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억울하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지금 많은 국민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준칙에 대해서 상대방 위원을 모욕하거나 또는 공연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상임위가 그동안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수당이지만 발언의 기회도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적고 이 회의 분위기 전체도 지금 사실은 다수당인 야당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무거운, 이런 상심한 그런 상황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높은 목표를 위해서 저희 여야 위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상대 위원을 모욕하거나 상대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현안과 관계없는 일로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거나 하는 이런 일로 해서 회의가 멈추거나 방해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있습니다. 다 맥락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언의

기회도 적고 또 위원장님이나 이 상임위가 사실 야당 위주로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이 혁신 생태계를 빨리 가동시켜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고 우리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곳인 만큼 말 또한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언행 그리고 상대방 위원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보면 주로 제가 망신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지만 그러나 국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문제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로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회의장에서 더 중요한 법안과 예산안과 결산안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서 그런 문제에 얽매어서 서로 더 고성이가 올라가고 이 현안은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내가 마음 상한 만큼 다른 위원도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염두에 두고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제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의 무죄와 관련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방위가 아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여 차례,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위원회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위원회가 많이 열렸고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조금 더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거고요.

특히 저희가 질의를 끝냈을 때, 여당 위원들이 끝냈을 때 위원장께서 저희 질의 내용을 깎아내리는 걸로 들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숫자로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 저희가 위원으로서 위원장께 요청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집행금지 가처분을, 권태선 이사장, 이사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집행정지 인용률이 행정 사건의 경우에는 53.3%고요 그리고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8.4%만 승소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안 소송에서의 문제가…… 다툼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가 편향적이다, 역대 사법부에서 재판 지연이나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 수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재판부가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미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있습니다. 다만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과 함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제 방통위원들 2명을 추천하겠다고 했으니까 조속히 5인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역시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 관련해서 국가적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과제를 우리가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도 더 빠르게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시지요.

○박정훈 위원 R&D 예산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3년에 예산을 줄이면서 관련 학계 R&D 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 피해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R&D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당사자들한테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을 주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피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액수를 정해 놓고 줄인 건가요, 아니면 비효율이 있는 부분을 건어 내기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나눠먹기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을 타기팅 해서 줄인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물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예산에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조금 일괄적으로 줄어든 부분도 사실 보이고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줄이는 바람에 건전하게 연구해야 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간 것도 사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썽요, 그 구체적인 피해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전수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만 중단된 과제가 한 96건 정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이후로 그 과제가 다시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타진하고 이리저리한 조정을 계속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줄였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스스로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그 합리성을 복원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킨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잘못 집행됐다고 판단한 부분들도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잘못 집행된 부분들은 그대로 줄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방향에 대한 예산집행을 더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번에 25년 예산에는 복원이라는 그런 차원의 연구비를 한 것은 아니고요. 비효율이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걷어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예산이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이 삭감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도 명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러니까 특히 신진 연구자 부분이, 수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진 연구자는 그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수월한 사람이었는데, 우월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기관에 들어오면 연구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되니까 거기서 수월성을 논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월성을 다시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에 대한 것이 조금 결여돼서 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를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법원의 결정은 대다수 언론들이 평가를 이렇게 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방송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뭐냐면 입장은 다르더라도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 활동에 그래도 같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이야 여당이니까 또 대통령 위세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 하지만 역사에 남을 현장에 같이했다는 자부심이 집에 돌아가면 생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2020년부터—문재인 정부였지요—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들은 적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아마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면 2023년도에 제주도에 있는 한 산간지역의 수강생이 디지털 배움터의 수업을 받다가,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에게 전화 내용을 딱 물어보니까 강사가 인지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막았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특히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고령층 대상의, 좀 전에 말씀드

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랄지 이런 것들,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많이 해 온 것 같습니다. 2023년 결산에 보면 사업 집행률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R&D 예산이랄지 또 세 수 펍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장관님은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고령층 비율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수혜 인원이 22년에 약 80만 명, 그리고 지난해 23년도에 약 100만 명이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보고받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디지털배움터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무래도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이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민수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국민 대비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이 보니까 여전히 한 75%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있는데 예산이…… 보고 받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받았습니다.

○한민수 위원 23년 대비 24년 예산이 690억 원에서 279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썽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한꺼번에 400억 가까이 돈이 감액됐다는 것은 이것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기부가 이렇게 400억 원가량 깎을 당시에 이른바 대통령께서—윤석열 대통령이지요—주문한 R&D 예산 삭감 기조 여기에 동의를 해서 갑작스럽게 삭감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신임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것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인원도 적지가 않고 그런데 배움터 숫자를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011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배움터를 물론 거점센터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36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시다만 디지털배움터에서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신 분들, 고령층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줄여 버리면 거의 전 국민들이 지금까지 여기를 통해서 배웠던 게 중단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것은 2차관님이 더 저보다 잘 알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한민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줄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당시 680억 정도로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사업 운영이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011개가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점마다 교육 인원이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작았던 부분도 있어서 집중해서 36개 지역을 가지고……

○한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과기부가 사업 낸 자료를 보니까 예산 사업 설명자료를 산출해 보면 2023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690억이 들어가는데 1000개소에 개소당 97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고 24년도에는 800개소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한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거점 센터로 운영한다고 해도 36개소로 줄인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렇게 노·고령층의 분들에게 만약, 지역 거점이나 이런 부분에 복지관을 막 설치했었는데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상시적인 교육 센터를 만들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나간다면……

○한민수 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만 봐도 어떻게 준지를 아시잖아요. 강동, 강서, 도봉, 마포, 4개가 돼 버렸어요, 다 줄어 가지고. 제 지역구 강북도 없어졌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좀 더 쓰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민희 그렇지요.

○한민수 위원 아무튼 잘 살펴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위원님 지적 사항……

○한민수 위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강북이 없어졌다잖아요.

○한민수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에서 R&D 예산을 기존 발표보다 조금 더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확보했다기보다는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저도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도 만나 뵈고 과기부와도 소통하면서 그 래도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폭거로부터 국가 미래의 충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과제의 복원 예산은 없고 추정조차 추진 하지 않고 있어서 미흡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꼼꼼히 살펴서 정말 제대로 된 R&D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도록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인 국정 운영이 결국에는 R&D 예산 폭거 그리고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내년도 R&D 예산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R&D 예산을 29.7조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2000억 원을 늘렸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고물가 시대에 우리 장바구니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최근까지 함께하셨던 연구 현장도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R&D 예산이 과기부의 주장처럼 R&D 예산 다 뜯어 붙이고 어떻게 다 하더라도 29.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1% 예상하는데 이것 다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R&D 예산은 28.4조 원으로 사실상 1조 원 삭감되는 수준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R&D 예산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R&D 예산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끊임없이 정부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경기침체 일으키고 부자 감세로 수십조 세수 결손 내고, 모두 윤석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R&D 예산을 역대급으로 늘렸다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 연구자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은요? 내년도 이후 2026년도, 2027년도 R&D 예산은 사실상 동결입니다. 26년도 R&D 예산 30조, 25년도 대비 1.1% 증액, 27년도 R&D는 30조 3000억 원, 26년도 대비 0.8% 증액, 28년도 R&D는 30조 5000억 원, 28년도 대비 0.7% 수준 증액입니다.

지금 고물가가 뉴노멀이 되는 상황에서 올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내년만 증액을 하고 명목상 R&D 예산은 그 이후에 쭉 3년간 동결됩니다. 실질 R&D 예산은 사실상 삭감 수준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R&D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당초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그 국정과제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린 꼴이 아닙니까? 과 기계와 연구 현장에서 살려 달라는 처절한 비명이 커지다 못해서 각혈을 할 지경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R&D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 과기부가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꼭 필요한 것은 부탁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말씀하신 계획은 사실 계획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국가 R&D,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책임자로서 꼭 필요한 예산은 여러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22~26년도 중기재정계획 운용 수준 맨 처음에 발표 당시 33.2조 원이었는데 그 수준으로 R&D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어쨌든 그냥 단순히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선도형으로, 즉 선진국이 하는 형태의 R&D가 될 수 있는 예산으로 꼭 효율화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 목표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이처 인덱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또 다른 질의가, 중요한 질의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선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지금 아마 후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NST 이사장 모집 공고문의 자격요건에 보면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참 황망한 보도가 있는데 이번에 추천된 3배수, 3인의 후보 중 한 명이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모르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김영식 전 의원이 NST 이사장에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이 2개월 전인 6월입니다. 그때 당시는 NST 이사장 공모 절차 시작도 하기 전에 언론 보도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사실상 이번 추천 공모가 김영식 전 의원을 내려쬐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출연연을 관리하는 NST 수장으로 임명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불문율까지 어겨 가며 전직 국회의원을 NST 이사장에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NST 이사장에 지원하신 김영식 전 의원께서는 얼마 전 5월에 ‘과학기술인 정치인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라는 SNS 글을 쓰십니다. NST가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는커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그 족쇄가 결국 출연연들에게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김영식 전 의원은 R&D 예산 폭거 당시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옹호했던 인사입니다. ‘R&D가 성과 하나 없이 보여 주기식 쇼, 이권 카르텔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김영식 전 의원입니다.

이 발언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의 R&D가 성과 하나 없이 보여 주기식 쇼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연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 대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3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조성은 사무처장님 거기 앉아서 하실래요, 아니면 나와서 하실래요?

어제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자면 담당 재판부 판사에 관해서 국제인권법회 핵심 인사다 혹은 김명수 사단의 핵심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행정기관의 임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하고 과거 이러한 취지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에 대해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해서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본 안에서는,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당시 집행부정지 사건에서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신청인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재판부 혹은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안소송 혹은 항고소송 준비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오늘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 가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국무회의에 원래 제가 대참을 하려고 했는데 1급은 대참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무대행께서 가셨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랬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불법 스팸 문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32억 9000, 올해는 32억 2000, 크게 변동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조금 줄어 들었는데, PPT 한번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불법 스팸 문자 형태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 보좌진이 직접 받은 겁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1599-0001인데 국토교통부 민원상담실 전화번호예요, 실제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온갖 정부24 혹은 우리카드 발급알림, 국세청 이런 게 이게 정말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이런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스팸부터 카드 발급, 온갖 게 다 나와 있지요. 그래서 신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이게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이것을 지울 때 신고 기능이 있어서 하는데 그걸로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PPT 2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스팸 신고 건수가 얼마나 늘었냐. 이게 2022년에 2400만 건인데 23년에는 2억 8500만 건,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다음 PPT 띄워 드릴까요?

KISA의 스팸 신고 접수 현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91.3%나 늘어났는데……

이게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어디로 유출된 것은 아닌지 혹은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우려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는 이런 스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혹시 과태료 징수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과태료 징수율이……

○**김장겸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PPT 4번 띄워 보실까요?

이게 징수율이, 지금 세 번째, 징수율(B/A)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 보시면 이게 평균이 4.8%, 지난 5년간 그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과태료 미수납금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476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스팸 과태료 미수납이 이 정도로 늘어나면 이것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김장겸 위원**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2018년도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넘어온 그 체납액들이 한 500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체납액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재산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해 나가면서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당해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한 것은 거의 100% 이상씩 수납은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지난 6월 20일부터 스팸 급증 원인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긴급점검에 들어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긴급점검 결과를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점검 결과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마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자료를 제공해서 수사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도 앞으로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예산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올해가 줄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어제 법원이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의결, 7월 31일 의결에 대해서 집행,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하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인용했습니다. 어렵지요. 집행 정지 신청 인용,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당 기간 MBC 이사들 못 바꾸고 사장 못 바꾼다.

그런데 아직도 여당은, 오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MBC의 정상화가 지연됐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방통위에서 나와 계신 분들 유념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그동안 MBC를 통째로, 특정 언론사를, 그것도 공영방송사를 비정상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규정·매도해 왔습니다. 어떤 언론사의 특정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고 또 합당한 비판이 있으면 그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으로 반성하고 고쳐야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특정 언론사를 비정상이라고 전제할 만한가……

참고로 이 윤석열 정권은 방심위를 앞세워서 MBC 때려잡는 데 아주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MBC한테 부과된 제재들,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MBC 이미 재승인 탈락 사유가 됐을 거예요. 다행히도 법원이 지금 소송 걸 때마다 MBC 손을 다 들어 줍니다. 여당에서 들고 있는 MBC의 보도 사례들에 대해서 방심위의 제재가, 그 효력이 지금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앞세워서 MBC가 지금 비정상이다……

어제 법원의, 일종의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논평 제목이 ‘정상화 지연’입니다. 이런 정부 여당 믿고 방통위에서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면 나중에 감당 못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정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법리 구성이 돼 있던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7월 31일의 방통위 의결은 엉망진창이었다. 방통위의 소송 대응도 엉망이었다.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항고 포기하십시오. 항고 어디다가 합니까? 가처분 항고는 해당 재판부에 하는 겁니다. 판단 달라질 일 없어요. 소송비 이미 다 썼는데 더 쓰지 마십시오.

과기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한국의, 우리나라 시민들이 쓰고 계신 통신 요금 수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많이 높지는 않다, 해외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판단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 수준 비슷합니다.

○노종면 위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기부에서 저희에게 제공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띄워 볼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이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청문회 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주신 자료가 거의 일치하는 거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PPT 자료는 유럽 통신사연합회라는 단체가 5G 요금 수준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국이 지금 두 번째 막대그래프, 지금 첫 번째 표에서는 두 번째 막대그래프로 표기돼 있어요. 미국·한국·일본, 일본과 비슷한 수준. 아마 장관님께서 이 자료를 참고하신 모양이에요.

두 번째 표에서는 역시 미국이 가장 비싸고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하나는 요금이고 하나는 데이터당 요금이고.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셨나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혹시 과기부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셨다면 꼭 좀 챙겨서 장관님께 보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해 7월에 내놓은 자료입니다. 인용해 놓고 있는 저 내용은 영국의 리서치 업체인데 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인용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업체예요.

Teligen이라는 데서 2022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결과 OECD 국가들 중에서 비싸기로 일곱 번째입니다. 지금 37개 회원 중에서 31위라는 것은 낮은 순으로, 가장 싼 요금제가 있는 국가가 1위고요, 한국이 31위예요. 그러니까 매우 비싼 수준이라는 것을 저 자료가 보여 줍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BEREC이라는 EU의 통신규제기관인데 혹시 이 기관을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 기관에서, 그러니까 EU의 공식 기관이래요. 저기서 올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데이터 자료는 22년 치고요. 12개 비교 항목을 가지고, 요금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5G 쓴 거, 1G 쓴 거, 10G 쓴 거, 100G 쓴 거 등등 나눠서 12개 항목으로 주요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EU 국가들은 다 들어가고요, 미국 들어가고.

그런데 한국이 12개의 비교 항목 가운데 8개에서 1등을 합니다. 지금 6개만 제가 추려서 한국이 1등인 것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4개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안 보고 계신 나머지 6개 중에서도 한국 1등이 2개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2등이에요. 그러니까 12개 비교 기준 중에서, 비교 방식 중에서 한국이 8개에서 1등, 4개에서 2등입니다. 한국·일본·미국이 선두를 다투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1등으로 꼽힙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통신 요금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EU의 공식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는 지난 청문회에서도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셨듯이 통신 요금 인하할 책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자료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노종면 위원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2차관님 잠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가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자료가 유일한 자료라고 보고드렸던 건 아니고요.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통계자료들도 여러 가지 기준과 내용으로 되어서 일괄적으로 다 이것이 높다, 낮다,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중요한 것은 경쟁을 촉진해

서 요금을 낮춰 나가는, 부담을 줄여 나가는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비싸다는 거예요, 안 비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요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보면 예를 들어 5G 요금, 아니면 1위 사업자 기준으로만 또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LTE와 다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올레 중저가 요금제를 재편해서 내놓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그러세요. 대한민국 통신요금 비싸고 무엇보다 소비자 체감도는 매우 높다는 거는 뭐……

○노종면 위원 대통령 인식과 반하시는데요.

○위원장 최민희 대통령께서도 통신요금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셨는데 된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매번 반복하는데요. 2023년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 삭감이 진행됐던 그 날짜쫄인데요. 23년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에서 나온 24년도 주요 R&D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향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R&D 예산 삭감 대상은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효율화 대상 사업 중 폐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라고 과기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예산 삭감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번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R&D 예산 삭감이 나눠 먹기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용어, 나눠 먹기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인 용어가 너무 강해서 저는 그거를 비효율화를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장관님, 우리 법상, 국가 과학기술기본법상 보면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렇게 국가 R&D는 성과를 평가해서 그것이 예산하고 다시 연결돼서 우리 소중한 예산을 잘 아껴 쓰자, 이렇게 과기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2023년도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6월에 나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중 사업별 자체 평가 및 적절성 점검 결과를 본 의원실에서 살펴보니 과기부 사업 40개 중에서도

총 11개가 우수 등급에 선정되고 과기부 혁신본부 최종 평가에서도 적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11개 사업 중에서 단 1개만 예산이 늘고 10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사업들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분명히 사업 성과평가 연계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24년도 예산 설정 시. 그렇다면 법에 규정된 성과평가는 잘못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우리나라 예산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걸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하자는 게 중요한 철학 중의 하나인데, 아마 이쪽 영역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과를 봤을 때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 하는 파트는 줄였을 거고 또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그 예산은 그대로 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규 위원** 아니 장관님, 엄밀하게 따지는 성과평가를 했는데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안에서 삭감하는 이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예외지요. 그렇다면 법에 왜 명시합니까? 제가 보기에선 도리어 2024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법상 성과평가제도를 연계하라는 좋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과기부가 무리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산 관련된 심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장관님께 여쭙 보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선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상 평가 결과를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 연계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법 규정을 위반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민규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무래도 책임을 맡아 온 본부장님께서 조금 언급을 해 주세요.

**○박민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짧게 얘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 개별개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성과평가 결과 외에도 그 연도의 연차 소요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민규 위원** 제가 보기에선 재정 여건 그거 하나지요. 무분별하게 삭감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기부의 국가 R&D라는 게 매우 중요한 주요 사업인데 2023년도에 벌어진 이 문제, 법 위반의 문제는 과기부가 향후를 위해서도 또 과학기술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선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연도라든지 그 외의 평가기준도 있었지만 40개 중에서 11개를 선정했고 그중에 10개를 삭감했어요. 삭감 비율도 95%, 93%, 86.6%가 있어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르다 보니까 벌어진 잘못된 과실이자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했던 과기부 공무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저

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는 과기부장관님께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과평가를 무시하고 11개 중에 10개를 삭감했던 이 과정에 관여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반드시 자체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한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도리어 징계를 무작정 요구하기보다도 과기부장관님과 혁신본부장님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조사한 뒤에 국감 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 R&D의 근간이 흔들렸던 이 아픈 상처가 다시금 법률로 인해서, 시스템으로 인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본 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전 질의는 10번 이정현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저에 대해서 김현 위원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제 입장을 좀 밝혀야겠습니다.

지난 6월에 김현 위원이 방통위를 향의 방문했던 도중에 고성과 함께 절차를 설명하는 직원에게 향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였고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잠깐만 중단해 보세요.

오전에 보셨지요?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최형두 간사께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형두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소명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소명하는 것……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최수진 위원** 그건 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 시간이고 무슨 시간이고 오늘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진 위원** 위원장님, 그때 저의 신상발언을 위원장님이 받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신상발언을 할 그 계기가 있어야지요. 김현 위원님은 오늘 매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현 위원님께 이러시면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제 입장을 저는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최형두 간사님이 들어 보시고,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시간을 드릴 테니 내용을 최형두 간사님과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과방위가 파행된 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민주당으로부터는 너무 무르게 진행을 한다는 매우 강한 비판을 받았고 일부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들 조금씩 양보

해서 지금 우리끼리 내부회의 하는 게 아니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 오전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위원님을 또 지목하시면 곤란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의를 진행하시고 끝난 다음에 최형두 간사님하고 내용을 얘기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시 파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제가 30초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제 안을 받아들여 주시지요. 이게 뭐……

○김현 위원 최형두 간사도 내용 아시는 거잖아요.

○최형두 위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김현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또 약간 핀트가 다르겠지요.

○최형두 위원 본인이 지금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김현 위원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최형두 위원 명예훼손 소송 했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성명서를 내 가지고 제가 소송했다는 게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사실관계를 얘기했지요.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서 자기 입장을 간단히 이야기……

○김현 위원 제가 당했어요. 최형두 간사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또 김현 위원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수진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고 최형두 간사님과 내용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이상의 파행은 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7분 드리세요.

○최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진짜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도 충실했고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항상 존중했고 취소하라면 했고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든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쟁 속에 자꾸 이렇게 매몰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회 되면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시 7분 드리세요.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김태규 위원장님이 안 나오셔서 죄송한데 조성은……

○위원장 최민희 12시 12분에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민희 다시 7분 드리세요.

○최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글·애플의 앱마켓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앱결제라는 것 아시지요? 구글과 애플처럼 대형화된 플랫폼에서는 내부 결제시스템



만으로 자사 앱스토어를 유료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판매, 신용카드와 함께 각국 간편결제 이 정도 소액결제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앱마켓, 그러니까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자국을 보호하고 사업을 보호하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편중되지 않고 누구 하나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를 보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에 대한 구독상품을 보면 어디서 결제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자체 소액결제를 갖는 시스템이어서 소비자의 권한들을 상당히 축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구글에게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 2023년 3월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앱마켓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착수하게 됐지요. 그래서 10월에 이것에 대해서 구글하고 애플에 시정조치를 통보를 하고 과징금 부과 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서 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 1월에 이 일이 홀딩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이상의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봤을 때 우리 방통위는 ‘결제 방식은 결제 플랫폼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아웃링크 허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제삼자 결제 방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시행령이나 정확하게 봤을 때는 아웃링크 허용을 우리나라에서 법제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통위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안 나오시니 장관님이 좀 대답 가능하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저희도 일정 부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어쨌든 인앱결제 외에도 외부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서 사전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또한 외부 결제 제한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앱 사용자 말고 앱 제공자들에 대해서 애네들이 업데이트를 시켜 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카카오는 아웃링크 등을 포기하고 내부결제를 추진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앱결제의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본인들의 입맛대로 결제 수수료를 책정하고 외부 결제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업데이트 등 기술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앱 개발자들을 속박하는 점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법이나 제정이나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통위하고 ICT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과기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현재의 문제점을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EU하고 미국은 구글·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도 애플들이 30%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따르면 22년도 통계값을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10년간 8.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고 과기부도 이런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쟁 속에서 하지 말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주머니 싹짓돈이 모여서 정말 8조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방통위와 과기부가 국민의 정말 세세한 데까지 들어가서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외부의 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글은 이미 우리한테 커다란 공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와 함께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도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여당 질문에 올해 예산 깎아서 영향 받은 연구자들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시는 모습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학교도, 출연연도, 스타트업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몰리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지요. 부자감세 하고 연구개발비 깎고, 부자 뺏은 살리고 나라 짝은 자르고…… 같이 춤추실 필요 없잖아요. 과기정통부장관님만은 과학기술계 편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허수아비로 그 자리에 앉으신 것 아니라는 모습 강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쏟아붓는 연구개발비 대비 노벨상 수상 실적 운운하면서 여러모로 모자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연구자 중의 한 분이셨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냥 일반 연구자들이 논문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어? 그런 논문이 있어?’ 하면서 제일 처음에 찾아보는 그런 검색이네요.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참고로 검색 결과는 늘 변하니까 감안하고 봐 주시면 좋겠는데—저 첫 번째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첫 번째 사이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IEEE Transactions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첫 번째 사이트는 모르세요? 첫 번째 사이트는 아카이브라고 불립니다. 프리프린트되는 논문들이 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참고로 제가 찾아본 논문은 AI 쪽에서는 꽤 유명한 논문이고요. 어제 저에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신 챗GPT의 T가 Transformer라고 해서 그 T, Transformer에 대한 논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관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IEEE Transactions나 아니면 저널, 저도 예전에는 그런 데를 찾아봤었는데 지금은 우선순위상에서 아카이브가 그 자리를 점점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평가에 사용하는 정량지표인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아카이브는 몇 점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제가 일단 이 아카이브를 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카이브는 빵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임팩트 팩터 0이요.

○이해민 위원 예, 임팩트 팩터 빵점이에요. 저 논문 다른 데 출판되기 전에는 만약에 저 훌륭한 논문을 장관님이 쓰셨어도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평가받는 지표인 임팩트 팩터는 빵점입니다, 저렇게 전 세계 AI 분야를 뒤집은 논문요.

저는 언젠가는 아카이브도 다른 사이트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정 사이트가 옳다 그르다 지금 그 논의를 할 건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량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정량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 연구자 그 마음을 아셔야 된다. 결국 평가하고 연구개발비 나눠 주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결산 심사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세금 제대로 쓰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긴 안목으로 세금을 사용하고 계신가, 아니라면 좀 더 건강한 연구개발 환경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셔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장관님도 사실 단 1건이기는 하지만 장관님 학생이 17년도에 부실 학회에 참여해서 징계조치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한 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해민 위원 저는 저변에서 퍼지고 있는 그런 부실 학회 이슈는 결국에는 과기정통부의 이 극단적인 정량평가, 관리만 편하게 하기 위한 정량평가에 몰입하게 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출신으로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연구자 잡으시려면 예산하고 함께 평가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 선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 직접 과기정통부에서도 질적 평가로 옮겨 가야 된다, 아주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KISTI 자료 보면 약탈적 학술지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하고 성과평가법 제정, 그다음에 교원 연구실적 인정 기준 마련, BK 3단계 사업같이 양적 평가가 강화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연관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카이브 예제 보듯이 세상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임팩트 팩터, 그게 쉬우니까, 숫자로 나와서 쉬우니까 그리고 뒤에 숨으면 되게 편하니까 임팩트 팩터 계속 쓰는 거예요. 결국 임팩트 팩터도 민간에서 하는 거고 한중일, 대만 위주로만 좋아하는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에 눈 먼 이상한 학회 많이 등장하고 우리 연구자들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국고에서 그쪽으로 돈이 가게끔 평가지표를 구성해 놔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볼까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상대평가까지 도입을 하겠다 하십니다. 안 그래도 병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사지로 내몰겠다라는 소리라고 보고요, 제대로 전문적으로 질적 평가하실 방법을 찾지 않고 연구자들을 지금 줄 세우기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은, 해 보셔서 아시지만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줄을 서기 위해서,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진짜 연구 옆으로 치워 두고 임팩트 팩터 사냥에 등 떠밀립니다. 주변에 연구자들 많아서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정량평가로 줄 세우고 예산 깎아서 카르텔 체결한다 하고, 이것은 기재부장관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는 절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혁신본부 쪽에서도 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들으셔야 되고요. 장관님께서도 과학기술계 출신으로서 과학기술계 대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 아는 분이 장관으로 가시더니 과학기술계 배신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평가지표 제대로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제 과제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

지금 선도형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질적 평가를 위해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월성원전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가 유출된 날짜가 언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회 날짜를 제가 지금……

○이정현 위원 6월 22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6월 22일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냉각수가 유출되고 나서 얼마 만에 해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당일 날, 해수는 당일 날 채취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7시간 만이지요? 7시간 만에 해수를 채취해서 검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까, 7시간이나?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가 해수를 채취하는 시간도 있고요, 분석을 하는 시간도 걸립니다.

○이정현 위원 분석을 하는 데 어떤 장비를 썼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농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고농도인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할 정도의 농도인지……

○이정현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정현 위원 섬광형 검출기를 썼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이정현 위원 섬광형 검출기가 있고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기본적으로 정밀도하고 측정하는 농도의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요. 정밀도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러니까 액체섬광 같은 경우는 고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이정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섬광형 검출기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섬광형 검출기는 활어차 그리고 선박평형수 등을 조사할 때, 현장 분석할 때 쓰는 장비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당연히 처음에는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정현 위원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정밀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농도가 고농도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7시간 만에 채취를 해서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에 비해서 정도가 낮은데 이게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정밀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MDA라는 게 있지요. MDA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검출하한치라고 해서요.

○이정현 위원 최소 검출 가능성 농도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검출해 낼 수 있는 장비가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라고 한다면, 쓰신 섬광형 검출기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100 이상, 그 이상 한참 더 많은 농도가 있어야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섬광형 검출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도가 1이라고 할지라도 잡아낼 수 있는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를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시간이 걸립니다.

○**이정현 위원** 시간이 걸리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아까 정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현 위원**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었고 KBS가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서 보도했던 뉴스 리포트가 있는데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슘 137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이정현 위원** 원래 이 장비를 써 가지고는 세슘 137을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거기 발표 자료에 보시면……

○**이정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검출하한치를 표시해 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그 가능성 농도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제대로 검출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썼는데,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감마선 분석 장비를 지난해 구입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냉각수가 누설이 됐는데 이게 정말 고농도냐 아니냐, 위험한 거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하려면 측정 시간은 짧지만 고농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먼저 쓰는 게 맞고요.

○**이정현 위원** 그게,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다음에는 정밀분석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분석기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PPT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정밀분석과 신속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8만 초 측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분석도 아니고 신속분석을 했어요. 신속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8만 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요? 활어차에 썼던 섬광형 검출기에는 3600초니까 1시간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속분석은 몇 날 며칠 몇 개월이 걸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8만 초니까 굉장

히 많은 것 같지요? 22시간이면 검출할 수 있는 겁니다.

1시간에 검출할 수 있는 것을 써서 이것 별로 문제가 없다, 세슘 137이 검출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발표할 게 아니라 22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장비를 써서 신속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1시간에 나오는 장비를 써 놓고 아무 문제 없다, 세슘 137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위원님, 일단 문제 없다고 저희들이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런 보도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언론하고 언론중재와 관련된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서 얘기하는 측정의 초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측정하는 기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처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전처리는 어떻게 시료 채취가 됐냐, 무엇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핵종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6월 22일에 누출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지요? 시간이 꽤 지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지금은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내용대로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낮으면 정밀분석,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을 많이 거쳐야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앞선 PPT 한번 다시 보여 주십시오.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를 지난해 1대당 1억 8000만 원씩 예비비를 투입해서 2대를 구입했지요? 그러면 이것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안 쓰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마형은 22시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당장에 누설이 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여 시간 동안 분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 7시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분석해 가지고 세슘 137이 검출되지 않았고 수치에 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들이 검출하한치를 2~3Bq/ℓ 라고 표시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출이 안 됐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그 장비를 쓰고 그다음 날 이삼일 뒤라도 신속장비, 제대로 된 장비를 써서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지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들이 지금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사이에 몇 달이 지나 버린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기본적으로 지금 해수에, 해양으로 누설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니면 확산이 되어서 측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치를 발견하기 위한 정밀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를 처음에는 썼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삼일 뒤에는 제대로 된 장비, 감마선 분광분석 장비, 지난해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쓴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해서 발표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해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께 질의드리고 또 이창윤 1차관께도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후속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에서도 우주수송 역량을 높여 가기 위한 우리의 대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2조가 넘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이천몇 년도까지 뭘 만든다는 게 목표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23년부터 32년도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 290억 원이 편성됐는데 집행예산이 왜 111억 원밖에 안 됐습니까? 3분의 1밖에 집행이 왜 안 됐지요? 아시나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작년은 사업의 첫해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신성범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면 290억을 해 줬는데 거의 111억을 썼다, 이 부분은 1차관님, 내용을 좀 아세요? 차세대 발사체 사업 말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예.

○**신성범 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냐고요, 집행률이 낮냐고. 두 분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주관기관이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민간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와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물품을 조달하는 그



런 용역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잠시만요, 어려운 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90억을 작년도에 썼는데 38%밖에 안 썼다, 올해 예산은 1100억 대인데 이렇게 되면 집행이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 일부 보도되고 있는 게, 보세요. 지적재산권 소유권 문제 때문에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에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신성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항우연, 그러니까 우리 청의 소관기관인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측 입장이 둘 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우주항공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일단 민간기업이 작년에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1차, 2차가 유찰되는 바람에 올해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집행률이 저렇게 낮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올해 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계약 이후에. 그래서 조달청의 이의 제기 그리고 분쟁위원회에 재심 청구까지 진행된 사항인데, 물론 재심 청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양 기관의, 저희 우주항공청은 아무래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이고 그래서 이 두 기관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

○**신성범 위원** 이게 말이지요, 보세요.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때는 분명하게 정부 라인에서도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항우연과 기업 간의 역할, 지적재산권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고려된 계약과 협약 방안이 요구됨’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지적재산권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청에서 항우연하고 한화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중재자가 아니에요. 입장을 가지고 양쪽을 설득하든지 결정을 내려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중재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요청서 이때도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주관연구기관의 특허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업과 항우연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시는 대로 지금 항우연하고 어떻게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일반 기업체 중에 이렇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일반 회사가 있습니까, 한화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국가기업으로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다른 기업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입찰을 하였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정 기업에 대한 도움 주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와 그래도 일반 항공우주업체 간에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정부에서 어떻게 기계를 만들겠어요, 발사체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청장께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운데 서서 중재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스운 행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이게 말은 많은데 또 이월이 100억 원 됐어요. 이게 업체가 없습니까, 기술성이 떨어졌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이것도 항우연이 집행하는 예산이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한국형 항법시스템 개발은 2035년도까지 한 3조 7000억 원에 해당하는……

○신성범 위원 아니, 규모를 묻는 게 아니라 왜 예산이 계약 지연을 이유로 매년 100억 원가량이 이월이 되고 있느냐, 업체가 안 나타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되고 있냐고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첫 단계 위성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우주항공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이게 왜, 아시는 대로…… GPS를 대체한다, KPS를 만든다, 얼마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대로 서부 쪽에서는, 서부 해역 쪽에서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GPS 교란행위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국형은 언제 나오는 거냐, 위치정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진을, 에러를 몇 m로 좁히겠다까지 발표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아무래도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지궤도위성 3개 그리고 경사궤도위성 5개, 8개의 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KPS 사업의 첫 위성 개발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정 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연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 죄송합니다. 항우연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우주항공청에서, 산하 연구기관이면 모르겠으나 우주항공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연구가 지연되고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돼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의 산하기관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 우주항공청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유상임 장관님, 한 가지 우선 여쭙게 지난번에 2023년에 포항가속기가 전기요금에 올라 가지고 전력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가동을 한 30일 정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1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1차관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마침 보니까 안덕근 산업부장관님께서 혹서기가 지나면 이제 전기요금 올릴 것이다라고 발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완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전력요금 인상에 대응해서 충분히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기관 내에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이것 비싼 장비가 전기료 때문에 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강도현 2차관님, 대통령께서 최근에 텔레그램 관련해 가지고, 딥페이크 합성물이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사진을 취득해 가지고 학습시켜 가지고 딥페이크물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께서 조기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현실적으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데, 거기에다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현재 딥페이크에 대해서 표시 의무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계 부처들과 같이 긴밀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서 규제에 대한 문제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관별로 굉장히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방심위원장은 안 나와 계시지만 방심위는 건별로 신고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 같은데 과기부에는 아마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로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텔레그램 자체를 차단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게 과잉 규제로 결론 날까 봐 이런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내용에 대한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역할들이 있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과학기술이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단 문제들을 조금 더 면밀히 같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그런 점에서 정말로 피해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검토를 좀 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이게 가끔 가다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농담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 점 유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 여쭙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과기부도 신경 써야겠지만 방통위도 좀 신경 써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에서도 국내 카카오톡과 해외 텔레그램이, 사실 카카오톡은 지금 검열 서버 비슷한 것을 두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텔레그램은 이번에 프랑스에서 CEO가 잡히고 이랬지만 전혀 우리 법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썽요, 어차피 국제적인 협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관계 부처끼리 협조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 우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게 이게 정부 측에서 하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10대 모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더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가 가지고 학생을 수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말 한마디면 실제로 동급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정도로까지 지금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방통위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어쩌면 방심위까지도 해 가지고 빨리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구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면 저 텔레그램봇 방에 2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의 어떤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적으로 22만 명 정도가 그 방에 참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전체 사용자 수가 9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용자 수를 대입해 보면 실제로 한 7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다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고 실제 그것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새겨들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리고 류광준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최형두 위원님과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재미 과학자들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공고를 내고 7월 달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완료될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다음 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방통위 때도 80명을 심사하는 데 몇 시간이면 되냐 이랬던 것처럼 이 연구과제를 심사하는 데 한두 달이면 충분한 기간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아마 공고 나간 것은 늦더라도 이미 그게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지원액도 상당하고 국가적으로 관심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 보니까 이번에 보스턴 코리아는 주로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심사하는 게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미국 NIH에서 하는 심사나 이런 걸 보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심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압축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알겠습니다. 사업 부처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어제 법원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께서는 판사 출신으로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인정합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것 인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인정되는 문제하고 불복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느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존중하지요.

○정동영 위원 존중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정동영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정동영 위원 민주주의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법성이요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김태규·이진숙 방통위원 두 분이 이렇게 똑딱똑딱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그것은 2인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도 생략하고 임명 당일에 군사작전 하듯이 10시간 만에 해치운 것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 안 했다면 나는 그것이 이상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막심한 이런 행정행위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입법 목적을 배신하는 이런 방통위의 존재와 그 행태에 대해서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방송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고 방송산업에 위기가 닥쳐 있는데 방통위는 무력합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을 규제·진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이런 방송들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급한 통신 현안이 많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지원방안 등 그 시급한 현안과 관련해서 통신 정책이 실종됐습니다. 통신산업 정책 결정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 정책에 전문성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합의제 기구에 합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합의제의 배경은 바로 정파적 다양성 속에서 공익과 공공성을 구현하라는 것인데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방통위를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고 미디어 부처에 통폐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운영되는 것은 방송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방송산업, 통신산업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의 연장에서 2023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방통위가 쓴 돈 490억 그리고 방심위가 쓴 360억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과방위의 예산결산소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일반예산 490억 가운데, 2023년 결산입니다.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돼서 다음 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이 되어 올 텐데 이 방통위 일반예산 가운데 공정방송·통신환경 조성 150억, 인건비 230억, 380억을 제외한 본부 운영경비 34억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방송의 공익성과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본부 운영경비 34억을 삭감할 것입니다.

또 방심위 예산 360억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받는 360억이지요. 이 가운데 인건비 200억, 공무원들 임금은 받아야 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51억과 방송심의 활동비 79억, 합쳐서 130억. 방송심의위원회가 활동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침해되고 내려갑니다. 부끄러운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권과 예산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국회가 입법한 법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스물한 번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을 완전히 짓밟고 무력화시켰

습니다. 입법과 행정은 대등한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입법 목적을 배반한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당연히 입법부에 주어진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고 방심위를 운영해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예산 34억 삭감, 방심위 예산 130억 삭감,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대로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 저의 이런 소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서 국민에게 AI 혁신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과기부 산하 지능정보원이 전담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능정보원이 유튜브에 올린 전북 장수 사과 당도 품질 데이터 사진입니다. AI 기능을 활용해서 사과 당도 등급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로데이터를 촬영하는 방법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사업 구조입니다. 예컨대 가 업체의 미션은 A에서 D등급 사과 사진을 각각 1만 장씩 총 4만 장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인 정부가 2020년에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 규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예산이 39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추정으로 약 3300억 원까지 증액됐고 21년에는 3700억, 2022년에는 5800억 가까이 그리고 23년에는 2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100% 집행됐습니다. 4년간 약 1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5월 감사원이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이 감사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간결한 보고를 받았습다.

○박충권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보셨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구체적인 것은 2차관님께서 대답해 주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다.

○박충권 위원 제가 한번 감사 결과를 총평을 해 본다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엉터리 AI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정수급도 발견이 됐지요. 총체적 관리 부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보실게요.

일례로 가 업체가 등급별 달걀 사진을 1만 6000장 이상 구축해야 되는데 감사 결과 가 업체의 B 등급 달걀 사진이 44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업체가 예산을 약 19억 원이나 가져갔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2년간의 결과물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뭉치 360개 가운데에서 122개, 약 34%에 달합니다, 이게 AI 학습에 쓸 수 없는 정말 품질기준 미달 상태의 쓰레기 데이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122개 쓰레기 데이터 뭉치를 만드는 데 투입된 나랏돈이 약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1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과대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900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단순 단기 알바를 양산을 했고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총체적 부실이 예견됐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사업이 21대 국회에서부터 4년 가까이 문제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왔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물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2차관님께서 해 주세요.

○박충권 위원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전체 사업 규모와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체 사업 다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감사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또 학습용 데이터의 발전 방안이나 내용들도 변화된 LLM 모델에 맞추어서 변화를 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예산으로 투입할 때는 이게 정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분야별로 수요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정보원은 AI 데이터 사업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 관리에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라면 로데이터 불량에 대한 품질 검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로데이터 품질에 대한 과기부 자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을 드리고, 둘째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어서 유상임 과기부장관님께 또 AI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기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AI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 경쟁에서 혁신을 AI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지요. 그런데 AI 법이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성과 규제 수준 상향 필요성을 이유로



여야 간의 합의 결렬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AI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AI 기본법은 가능한 조속히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AI 법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규제의 측면과 하나는 진흥의 측면, 이 양 측면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법은 가급적이면 진흥을 조금 더 우선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AI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과학의 도시 포항남·울릉 이상휘 위원입니다.

과학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죽 질의를 들어 봤습시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도 많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미확인 비행물체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UFO요.

○**이상휘 위원** UFO 이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웃음)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오늘 상임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어느 분이 이걸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시는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기라성 같은 과학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과학기술을 폼페이하려고 또 회화화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과기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것이 민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부처일까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게 실생활 속에 과기부가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AI, 디지털, 우리는 굉장히 첨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만 이것이 그 정책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민생의 구조를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과학과 과학 정책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를 꿈꾸지 말고 손에 잡히는 미래를 꿈꾸는 게 과학 정책이 아닌가, 주제 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를 꿈꾸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과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좀 더 환경에 맞는 그러한 어떤 과학기술 정책이 좀 와닿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저는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환경은 스마트해야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하지 않으면 환경은 보전되지 못한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그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스마트입니다. 디지털이고 AI라는 것입니다.

과기부 내에 어떤 정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책의 가운데서 지역과 민생과 맞닿은 그런 정책을 개발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부처들, 예를 들어서 산업부라든가 또 환경부라든가 이른바 협업 관계에 의해서 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이 과기부가 중도에 서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천혜의 비경 섬입니다. 이것 개발의 논리에 빠져서 상당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빚지는 겁니다, 우선 편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깐 이 간극 줄이고 해소시키는 게 스마트밖에 없어요. 과기부밖에 없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로 만들지 말고 일정 목적 기반 드론이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당히 과학, 미래 정책에 와닿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장관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취 위원 제가 과학을 잘 모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기부에 대한, 민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런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취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님, 요즘 머리 아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괜찮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12부 강재원 판사 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취 위원 법관 출신이시지요, 직무대행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맞습니다.

○이상취 위원 좀 평상시에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전혀 친분이 없습니다.

○이상취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직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최종적인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직역이든지 다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취 위원 외생적 변수라든가 외부 영향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지요. 왜냐 그러면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되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실제 재판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보다도 법원 내에 그러한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의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휘 위원** 제가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관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해 왔는데 그러한 어떤 외부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요소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판결에 대한 중요성, 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려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있다는 데 안타깝고요.

죽 보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위법성과 불법성이 없으면 일종의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법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법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공정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은 행정청이 한 처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적 효력 이런 등등의 다른 용어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법률적 지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처분과 관련돼 있으면 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켜져 왔던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썄요, 저는 지켜져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면 결국 판결의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이 돼서……

○**이상휘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이건 지금 행정공백 발생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행정공백?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썄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옮기지 않아도 예상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위원** 신청인에 대한 심대한 이익의 손상이 있다 이런 판결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 그 심대한 이익의 침해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두 가지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판단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어제도 제가 그런 사정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계속 언급하는 것은 향후 변론 방향이나 아니면 변론 대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고를 하고 또 본안에 대해서 성실히 다투는 것이 저희들이 변론을 대응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저는 죽 그렇게 말씀드리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읍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 국무회의 다녀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다녀왔습니다.

○이훈기 위원 어제 인용 결정 보고했습니까,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국무회의 안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국사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언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 합당한 행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결산 질의에 앞서서 어제 결정문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결정문을 보면 행정법원 12부에서 ‘방송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이요.

그리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칙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를 존중한 거지요. 그리고 ‘2인 위원으로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인 위원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을 했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기각이 됐지만 행정6부에서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재적위원의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안에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날 7월 31일 회의에서 기피신청 셀프 각하한 것 그리고 9인 중에 6인만 임명한 것 이것도 각하를 했지만 문제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다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날 회의는 모든 게 위법이고 문제가 있다고, 각하한 행정6부에서도 이렇게 결정문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결 이유가 붙게 마련이고 판결 이유에서는 나름의 어떤 논리 전개 방식으로 판사의 판단의 정당성을 펼치게 됩니다,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짧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의 판단은 그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상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상소 제도를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잠정 재판의……

○이훈기 위원 그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첫 재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위협적인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송장악 결정, KBS 장악, YTN 민영화, 방심위의 언론 장악, 저는 이걸 다 위법이고 무효고 그래서 원상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회가 협조하고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과방위 예결위원이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지금처럼 한다면 여기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 방송 얘기만 해서…… 어제 TBS 말씀 좀 드렸고 오늘은 지역방송 말씀 좀 드릴게요.

지역방송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김태규 대행?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썽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이훈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 공론의 장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지방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문화 전승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난해·지지난해 보면 지상파 방송 매출이 한 3조 7000억 원으로 10% 정도 줄었고 지역 MBC는 한 14% 줄었어요. 지역 민방도 비슷해요.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지난해에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역에…… 잠깐만요.

○이훈기 위원 모르지요? 지금 작년에 방발기금으로 지역에 지원한 게 45억이예요. 지역방송사 수를 따지면 1개사에 1억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리랑국제방송 234억, 국악방송에는 64억이나 지원을 했어요.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냅니까, 안 냅니까? 모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훈기 위원 여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안 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역방송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여기다 썼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예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산도 이렇게 적은데? 이것 누가 이렇게 버젓이 썼어요, 여기 결산 제안설명 내용에?

아니, 지역방송에 지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능력이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 와도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썽, 지역방송사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는 그 주체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지원에 대해서 애를 쓰고 저희들……

○이훈기 위원 본 위원이 지역·중소 발전을 위한 기금을 포함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방송발전기금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에 가는 예산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역이나 아니면 중소방송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등등의……

○이훈기 위원 지금은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1억 갖고 프로그램 하나도 못 만들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대행께서는 업무를 전혀 모르시니까 뭘 질의를 해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세요. 맨날 잠도 못 자고 일을 하신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웃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방송장악에만 신경을 쓰십니까? 기본 업무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통위에서 쓰는 게 얼마예요, 총?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구체적인 수치를 일일이 다 따져 물으시면……

○이훈기 위원 아니, 전반적인 업무를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어차피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방통위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1인 체제라 결정을 못 한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의록도 안 썼잖아요. 앞으로 의결해야 되는 업무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훈기 위원 앞으로 의결해야 되는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의결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굳이……

○이훈기 위원 그러면 업무는 다 손을 놓고 있어야 돼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래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의결에 필요한 준비 작업들은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려면 해체하는 게 낫겠어요. 있으나 마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것은 그리 말씀하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사기가 꺾이는 말씀이시라서……

○**이훈기 위원** 아니, 지금 직무대행이나 그런 분이 직원들 사기를 꺾이게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있잖아요. 누구 탓을 하세요?

나중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뒤에 배석해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졸리시지요? 앉아서 졸지 마시고 졸리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졸릴 시간이긴 합니다.

최형두 감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디지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이제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 그리고 국가 운명이 걸린 인공지능·AI 정책과 입법 그리고 핵심기술의 개발을 둘러싼 R&D, 혁신 인재들의 양성 또 지역의 균형발전, 교육과 의료의 문제, 복지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과방위가 MBC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문제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신 생태계 또 과학기술계 이런 쪽에서는 과방위에서 방송을 좀 떼어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또 다른 상임위가 가면 다른 상임위가 또 마비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은 법원의 결정하고 또 탄핵 재판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빨리 그 결정이 내려져서, 항고심이나 또 본안 소송이나 또 탄핵소추 재판에서 결론이 내려져서 오로지 큰 문제의 핵심이었던 5인 체제 복원이 조속히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어제 유상임 장관께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현재 AI…… 오늘 결산이니까 결산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거 법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AI 클라우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없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 지원이나 선도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일정량 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형두 위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광주에 AI 클라우드 사업을 그동안 한 적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최형두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부분에 대해서 2차관 좀 대답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AI 본연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개별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있고 또한 일부에서 스마트공장 조성 부처로 보면 창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대구에서 같은 경우는 광주뿐만이 아니고 ‘데이터의 중심 도시, 블록체인의 중심 도시’ 이렇게 표방하고 계시고 대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중심의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여서 광주에 대단위 사업이

있었다면 개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부분적인 사업들은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특히 K-클라우드 사업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K-클라우드를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금 지역이 자꾸 어려워지는 까닭은 여러 가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있지만 교육과 의료환경이 지역이 자꾸 뒤쳐진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기부의 사업 설명을 꼭 보면 K-클라우드 기반으로 AI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또는 의료에서도 지역과 수도권, 수도권의 대형 병원과 지역의 작은 병원들, 그 의료 사이의 균형 또 의료 혜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의료 역시도 새로운 AI·K-클라우드를 통해 혜택을 골고루 나눠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획이 있던데 그 부분은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계속적인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하나 예로 들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대부분 지역 출신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서울과 지역의 교육 격차가 이렇게 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학교에서는 인서울 대학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격차가 커졌는데 저는 그 격차를 해소할 해법이 바로 AI 맞춤형 교육, K-클라우드를 통한 교육 같아요.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이런 맞춤형의 경우 새로운 온라인 교육을 통한 이런 혁신들을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 쪽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될 일은 아니고.

특히 이제 촉매제가 될 게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책으로 봐야 공부가 되는 세상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오히려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많이 접하고 그걸로 공부하는 세상인데 만일 그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응용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진도에 맞춰서 그리고 관심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아마 대단한 교육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강남의 대치동에 살면서 좋은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도 없을 테고 오히려 물 좋고 그다음에 바다 풍경 좋은 마산에 살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올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서울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싸고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이르고 있는데 사실 지역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치열하게 AI 디지털교과서의 보급·확산을 통해서, K-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혜택이 지역의 학부모, 지역의 학생들에게 뒷받침되도록 하는 사업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부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있고 현재 적용을 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설득 작



업들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한 보완해야 될 점들을 교육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지원하는 부분의 기술개발을 하거나 또 교과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을 클라우드로 엮었을 때 할 수 있는, 저희 국산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될 경우에 사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게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육부랑 협업하고 또 지역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이런 성과들이 머나먼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조금 전에 최형두 간사님이 질의했던 것 이어 가면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이 11월 말까지 최종 심사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대로 진행이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2차관 대답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에서는 순차적으로 학교에.....

○**김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대로, 개발 지원 계획이 11월 말까지 최종 심사계획으로 하셨는데 그것대로 지금 진행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교육부에서 검인정 절차를 11월 말 말까지.....

○**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내용까지 검토가 됐습니까, 지금 8월 달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제작에 대해서는 일부가 지원이 되었고 검인정 절차를 교육부에서 11월까지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지난번 박근혜정부 때 일어났던 국정교과서 시비에 휘말려서 그것이 논란이 돼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문제 제기를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교과서가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의 교과서가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이나 논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내용을 충분히 감수하고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검수나 검인정 부분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김현 위원** 교육부에서 나와야 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편향되고 또 편중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논란이 안 되도록 부처 간에 협의와 협조를 최대한 잘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방통위의 오늘 제안설명에 따르면요.....

아, 기조관이 나오시는 게 낫겠네요. 방통위요, 기조관이 나오시라고요.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통위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조관에게 질문합니다.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라고 셋째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는 다 기조관의 감수하에 나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인사말이나 상황, 제안설명이나 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것이 어느 정도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또는 방심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할 때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

○**김현 위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함께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방통위와 과기부 간에 실무자 간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 위원** 최근에 언론에서 집중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움직임은 전혀 없는 거지요? 어저께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질문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현재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텔레그램인데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처,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하고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김현 위원** 빨리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더 늦지 않게 일주일 또는 열흘 안에. 워낙 n번방 문제 때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수습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가 나오면 또 논의하고 그러다가 또 손 놓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시장조사심의관실을 왜 만들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통신시장이 보다 공정하게 유지되고 방송통신……

○**김현 위원** 그런데 방송기반국장은 공석입니다. 방송조사심의관은 만드는데 방송기반국, 이 문제가 앞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위원님이 제기했던 미디어 다양성 정책, 편성평가 정책, 방송광고 정책 등 방통위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부서인데 이 방송기반국의 국장이 빈 지가 거의 한 1년이 넘어가지요? 2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워야 될 자리는 안 하고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늘려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마땅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송기반국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자주 바뀌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김현 위원** 자주 바뀌지 않고 공석으로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오래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김현 위원** 겸임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김현 위원** 기조관님의 의견을 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7월 31일 날 들어오신 분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지금 계속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방통위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제가 왜 기조국장에게 이 질문을 하느냐면 감사원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와서, 전례가 없는 낙하산이 와서 방통위를 축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통위도 무너지고 방통위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정책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용산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방통위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들어가고요.

예산 관련한 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기조국하고 관련된 건데 어쨌든 사무처장님 나와 보세요.

텔레비전 수신료 관련한 재판 받을 때 변호사비를 지금 저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요? 내용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김현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변호사비 다 썼지요?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예, 그러면 전용했지요? 전용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자체 전용하려고 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자체 전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용돼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수신료 헌법재판소 재판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적이 있는데 물론 2024년도에 예산을 이미 다 썼지요, 2024년도 거는?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그렇습니다, 24년도.

○**김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그 예산은 2022년도 거를 또 쓰신 거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변호사 비용 계속 들어갈 텐데 이런 불법에 가까운 형태로 예산을 쓸 건가요, 지적사항을 개선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결산 심사를 더 세밀하게 할 텐데 지적된 내용은 아랑곳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현 위원** 방통위가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왜 국민에게 전가시킵니까? 국민의 예산 아닙니까? 국민의 돈이잖아요. 방통위가, 행정청이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방심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생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기 서 계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서 계시라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집행금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까?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행정 공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위원장 최민희** 좀 아까 질의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생겼다고 답을 하셨어요, 김태규 대행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행정 공백이 발생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문진 새로운 이사 선임이 어쨌든 간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는 정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새 이사 임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방문진이 업무 공백이 생깁니까?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전임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전임 이사들이 업무를 이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선고와 관련하여, 가처분 인용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 공백도 방송문화진흥회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방문진법 잘 보시면 김태규 대행님, 전임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반론 안 하실 거면 굳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이유를 제가.....

○**위원장 최민희** 여기 반론하는 자리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말씀하시라고 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새로 불법적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해도 현재 있는 방문진 이사들이 방문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진의 업무 공백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송장악과 관련한 혼란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방문진과 MBC는 언론자유와 방송 공정성을 위하여 더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말 중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띄워 보세요.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 핵심은 심리검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냐 마냐, 방심위 내부에서 의논한 적 있지요, 김태규 직대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심리검사 하자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정확히 좀 들으시지요. 심리검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냐 마냐를 놓고 방심위 내부에서 의논하셨습니까? 지시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위원장 최민희 김태규 직대가 심리검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 사무처가 심리검사 결과 제공했습니까, 자체 판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그것은 제공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저 기사는 어떻게 난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이것은 지금 인사처나 이런 데서 한번……

○위원장 최민희 정확히 말씀하세요. 인사처에서 흘렸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요. 그것은 어디서 누구, 저희도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심리검사가 인사처나……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요, 그러니까 심리검사의 주체를 저는 말씀드리는데 접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저는 지금 조성은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기사 전체를 보면 방통위 내부에서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좀 해 봤더니 방통위 사무처 일부는 ‘이러면 국회와 싸우자는 거다’ 그러면서 반대했다고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규 직대가 심리검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거를 지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안 하셨다고 답했다는 걸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최근 방통위 직원들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느닷없이 내각 후보자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이라고 어제 답해서 청문회가 파행되는 이런 현실인데.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방통위만 이런 기사가 언론에, 그것도 연합뉴스에 나는 게 참 이상한 일이지요.

저기 보면 방통위는 2022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써 있어요. 저것 무슨 뜻입니까, 조성은 처장? 바람 잘 날 없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과 검찰이 방통위와 방통위 직원들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한 마디로 방송장악을 하기 위하여 방통위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지금까지 지속됐고 결국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냈지만 MBC 장악을 못 해서 KBS 장악하려고 무리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하면 2008년 방송장악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직원들이 다 압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통위 직원들이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이 어려운 상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짜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가 중단되고 이제 방통위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후견주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도 괴롭히고 방통위도 괴로운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안은 정치적 후견주의 자체를 없애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장 뽑는 데 절대 의결정족수, 신성범 위원님이 논의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 법부터 논의해서 이 지긋지긋한 일을 끝내야 합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답변 포함입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PPT를 하나 보여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이것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또 보도전문채널뿐만 아니라 지상파에 포함됩니다만 지역의 민영방송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고요.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고 있는지 또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에 모 기업이 지역 민방의 돈을 마음대로 곳감 빼먹듯이 빼먹거나 또 방송경영에 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UBC 울산방송, 울산의 지역민방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정현 위원** UBC 울산방송의 최대 주주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아직 모르실 겁니다. SM그룹이라고 합니다. SM엔터테

인먼트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삼라로 SM그룹의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삼라입니다. 한번 SM그룹을 볼까요? 주식회사 삼라가 있고요, 그 아래에 SM경남기업이 있고 또 케이엘홀딩스가 있고 UBC 울산방송이 있습니다.

SM그룹이 울산방송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 2019년 3월 20일입니다.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삼라가 울산방송의 지분 30% 가지고 있는데 SM그룹의 자산이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까지는 잘……

○이정현 위원 모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정현 위원 뒤에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15억 정도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15억이요? 2023년 말, 지난해 말 기준 17조 1000억 원입니다. 17조 1000억 원이면 10조 이상, 훨씬 뛰어 넘잖아요. 이렇게 되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자,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도 잘 알고 있어서 이미 2021년 7월, 2022년 4월 등 해서 네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무런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정현 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UBC 울산방송의 자회사 UBC 플러스로부터 주식회사 삼라가 케이엘홀딩스라고 하는 다른 계열사에 무려 155억 원을 돈을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2023년 7월에 90억 원 8월에 65억 원, 155억 원을 빼 갔어요, SM그룹 계열사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간혹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빌려 갈 때에도 빌려 가는 명목인데 비상장 계열사 주식 120%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빌려 갔다고 해요, 다른 계열사. 이게 통상 금융권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물의 가액을 180~200%로 잡는데 120%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었어요, 155억 원을 빌려 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2019년 3월에 UBC의 대주주가 됐는데 2019년 4월에 이 대주주가 UBC 울산방송으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게 합니다. 서울 수유리에 있는, 예전에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이게 경관지구하고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하도록 해 가지고 이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내유보금이 270억 원 있는데 지금은 0원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UBC 울산방송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밀착형 방송을 만들고 수준 높은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유보금마저 바닥이 나니까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을 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 모르고 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비점이 없는지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난 금요일에, 지난 23일에 대여금을 가져간 것 UBC 플러스에 상환을, SM그룹에 케이엘홀딩스가 150억 원을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례가 UBC 울산방송뿐만 아니라 과거에 JTBC 전주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 모기업이 자회사 지역 민방의 돈을 빼 가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전수조사도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런 민영방송도 잘 살펴보시고 전수조사하시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 김태규 대행님, 법원이 어제 결정한 부분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2인 체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예, 그러면 2인 체제는 왜 생겼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법에 규정이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박정훈 위원** 아니, 2인 체제가 왜 생겼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2인 체제의 원인 말씀이십니까?

○**박정훈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좀 다르시긴 한데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인이 추천이 안 된 상태에서 2인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탄핵까지 이루어지면서 2인 체제조차도 기능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전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3명을 의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2인 체제 때문에 그 부분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요 이 정부 내내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는 교체가 불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법원의 논리라면.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언급드리는데 적절치는 않은데……



○박정훈 위원 해 보세요, 그냥.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다만 우려하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임기 조향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정훈 위원 그러면 행정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 우려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법원이 이 결정을 실제로 본안 판결에서도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에서 사실상 모든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요. 법 취지는 3명·2명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다뤄라 이런 취지가 법인데 야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법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방송장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KBS·MBC 이사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에서 당시 업무를 했던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박정훈 위원 그보다 더한 방송장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평가는 보류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예, 그보다 더한 방송장악은 저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KBS가 사장이 바뀌고, 지배구조가 바뀌고 또 YTN이 민영화된 뒤에 MBC처럼 특정 정파를 위해서 보도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보도 내용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 역시도 평가는 보류하지만 그러한 논의들이 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만배·신학림 보도처럼 완전히 허위·날조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대선 이틀 전에 여러 꼭지 메인 뉴스에서 하는 보도처럼 그렇게 특정 정파에게 집중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KBS나 YTN이 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선례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뭐가 방송장악인지 뭐가 방송 정상화인지 기본 개념 자체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심리검사 얘기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박정훈 위원 방통위 직원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금 아니라고, 아마 이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하고……

○**박정훈 위원**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이유는 지금 다 어느 정도 짐작하시지 않으시겠나 싶기는 한데요.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의 기관장이 여러 차례 바뀌고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면 그것을 뒤에서 감당해 내야 되는 직원들이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훈 위원** 종편 점수 조작에 가담했던 직원들 문제는 잘 정리가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훨씬 전 일이라서, 기본적인 그 내용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부적인, 조직 내에서의 어떤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 공백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공백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업무 공백이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방문진이라는 그 기구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종료된 사람이 그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임기가 정상적인 기간 안에 있을 때 하는 행위와 동일한 정당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임기 조항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은 기관에 대한 어떤 장애를 일으킨다,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훈 위원** 본안 재판이 통상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럴 경우에?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금 본안 재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룰 수는 있는데요. 물론 빨리 하면 몇 달 안에, 수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지만 길어지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3년의 임기가 4년, 5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 조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신상발언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아마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세 차례 정도 그리고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방통위 2인 미완의 구조의 시발은 최민희라는 이름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라는 사람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를 통하여 최민희라는 사람은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명될 듯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최민희를 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

고 그 사람은 7개월 7일 동안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고 철창 아닌 철창 신세를 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법제처라는 기관이 최민희가 방통위원회 부적격 사유가 있다며 판단을 한다면 7개월 가까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어느 날 새벽 최민희가 부적격이라고 법제처가 판단했다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법제처는 ‘우리는 부적격 판단한 일이 없다’ 해명자료를 냅니다. 최민희라는 사람은 언론중재 신청을 했고 이겁니다.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정정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제처는 최민희의 부적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고삼석 방통위원이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부적격 시비 일었는데 그때는 법제처가 7일 이내 6일 만에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방통위원회 임명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최민희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열헌—동아일보·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이분을 김진표 의장이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영 교수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명한 사람은 전부 대통령 추천 몫뿐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든 시발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민주당이 추천 안 했다?

그러면 최민희 그만뒀으니 추천하지, 그러면 그 최민희라는 사람 뭘니까, 대한민국에서? 7개월 7일 동안 보수 언론을 비롯하여 당시 국힘 과방위 간사가 온갖 모욕을 해도 7개월 7일을 아무 말 못 하고 참은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 왜 자꾸 이 말을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자기 당 추천 인사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또 추천 안 하고…… 모욕을 당할 텐데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최형두 간사에게 우리 추천하겠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겠느냐, 몇 번을 물었잖아요? 몇 번을 임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보고해서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없다면 자꾸 이 2인 구조 문제를 민주당 탓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인 구조의 모든 시발은 최민희 임명을 안 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것을 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 5인 구성의 완성은 각 당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해도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시면 5인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오늘 저의 이 신상발언을 계기로 다시는 2인 구조의 원인을 얘기할 때 최민희를 임명 안 한 것이 시발이다 말하지 않으려면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모욕감을 느끼고 들을 때마다 그 7개월 7일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우리 각자 조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구를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정말 마음의 상처도 입고 탈당까지 했습니다. 저도 같이 정무직 당직자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저는…… 어제부로 판은 바뀌었습니다. 다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들 하지 말고 좀 지켜보시지요. 제가 볼 때 큰 흐름은 바뀌었어요. 어제의 결정이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겁니다. 제가 나를 잘 관측하는 사람인데 한번 보시지요, 이 정권의 끝이 어떻게 나는지.

자, 지금의 사회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논평을 하나 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을 잡겠다고 나설 시간에 딥페이크 성범죄자부터 발본색원하십시오’ 이 논평 낸 다음에 제 SNS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목으로 냈다’.

그리고 우리 당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안위 일동으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당력을 집중해서 해결하겠다, 나서겠다 했습니다. 집권당이 할 일을 제1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것 같던데 잘하신 것 같아요. 실체 없는 반국가세력,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방심위도 내일 실무회의 거쳐서…… 오늘 실무회의 했고 내일 전체회의 소집해 대책 마련한다고 합니다.

방통위 차원에서 대책 마련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저희들도 다른 부처들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어떤 협조 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한민수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들은 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한민수 위원** 대통령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자 같은 거나 주변 의견 안 들습니까? 아마 우리 장관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상임위장에 있으면서도 곳곳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법 개정을 못 한 부분을 죄송스럽게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금 부처 간의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 결정도 났으니까 민생,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한번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상임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한민수 위원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제가 끝까지 못 물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 여기 수입으로 올해 과기정통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차입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국가재정법 제18조를 어겼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반이라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문제는 우리 자체의 검토 결과 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보고서 보면 내부거래 시 사용되는 예수금 항목으로 해당 부분을 기재하면 되는데 민간 차입금 결산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심각하게 면밀히 조사하니까 어쨌든 이런 전용은 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다른 지적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한민수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정진기금 부채가 2조 8000억 정도에 이르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지난해 부채 비율이 무려 1399%라고 하거든요. 이것 너무 안일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 아닐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안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대안. 이 부분도 살펴서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총괄하시는 존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께서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이 되면 존리 본부장은 미국 정부에 활동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가기밀이나 기술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에서는 국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지만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아무래도 외국인을 저희 우주항공청에서 고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제도 답변을 했듯이 FARA라는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비밀보안대책으로서 3급 이상 비밀을 열람할 때 인가증을 요구하는 비밀취급인가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외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할 때 정보 당국이나 외교부와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교정보 라인과 함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프로토콜 미리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항공혁신부문장도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황정아 위원** 향후에도 아마 해외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안 생기게 외교·정보 당국과 함께 소통해서 계속해서 프로토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개척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예타가 면제된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산이 당초 6000억 원에서 3800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200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특히 감액된 예산 대다수가 우주항공 R&D가 집약되어 있는 대전의 우주 연구·인재개발 클러스터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우주항공청 실무자들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 연구개발 R&D 그리고 인력 양성 관련 사업 부분이 빠지게 되면 대전 클러스터가 말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삼각 클러스터 사업 중에 대전이 R&D랑 인력 양성 특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을 허용한다는 그런 기준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이 제외가 됐는데 저희가 인력 양성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타 사업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저희가 보완·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 삼각편대 얘기하셨는데 삼각 클러스터 짓겠다고 지금 예타 면제했습니다. 예타를 면제했더니 정작 실제 사업을 반의 반토막 이상을 내 버리면 예타 면제를 했던 그 이유조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양성이 없다면 어떻게 연구개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속하게 추가 사업들, 대전의 부족한 부분들, 대전 클러스터를 궤도에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이전부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전·세종권에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67%에 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물론이고 융합연구 수행에 꼭 필요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다수의 연구개발 기관들이 대전에 집약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R&D 집적 지위가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현재처럼 결정이 되었는데 대전에 연구개발본부라도 신설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R&D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항공청장님과 과기부장관님께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척을 위해서 바르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은 현재 사천에 위치하고 있고 임무개발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R&D, 직접 R&D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하기관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고 두 기관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본부가 대전에 위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신데 저희가 아직은 우주항공청 전체 조직 충원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임무개발본부는 사천에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현재 만들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김태규 직대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또 현안보고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이 방송장악에 관해서 상당히 헛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방송장악에 관해서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MBC 당시 사장이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사내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광온 대변인이 당시에 ‘언론노조는 사장 퇴진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또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홍위병들인 언론노조원들이 나섭니다.

경영진은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옷이 찢기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한참 서서 입구에서 벌서다가…… 뒤에서 욕설이 들려옵니다. 정말 험한 욕설이 들려옵니다. 또 온갖 마타도어가 뿌려집니다.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이 들어옵니다. 기껏 취임한 지 석 달 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노조가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1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는데 노동부는 당시 이유 없다고 기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이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연장해서 제 기억으로 한 두어 달간 살살이 뒤집니다. 그 조사팀장, 노동부 조사팀장이라는 자는 언론노조 행사장에 가서 같이 구호를 외칩니다. 손을 흔듭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뉴스 다시보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경영진들을 특별근로감독 해서 노동부에 출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장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방송사 사장이 필요한 서류는 충분히 내고 담당 경영진, 본부장을 출석시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1일 날,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은 63빌딩이었는데 그 행사장에 국무총리가 원래는 참석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거의 폭도로 변한

언론노조원들이 둘러싸고…… 그 장면 지금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과 제가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한테는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당시 사법부가, 멸절한 방송사 사장이 그리고 무슨 자료를 안 낸 것도 아니고 출석을 몇 차례 거부했다고 그렇게 체포영장을 그날 맞춰서, 방송의 날에 맞춰서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노동청에 출석합니다. 출석하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끄집어낸 말이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저런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부장 전결인데 사장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까 그 당시 그 조사팀장이 ‘그게 법입니다.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출산한 여직원들을 역산해 가지고 그사이에 임신했냐 안 했냐를, 야근했냐 안 했냐를 그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요 이사들 집에 언론노조원들이 찾아가고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결국은 이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사퇴합니다. 그런 게 방송장악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다들 7년 만에 다 잊어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저도 질의할 내용을 준비했다가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 말씀 듣고 과거 기억이 자동으로 떠올라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08년 10월 6일 YTN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듬해 2009년 3월 일요일 집에서 구속됐습니다. 체포당하고 구속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외쳤던 구호가 공정방송입니다. 제발 방송할 수 있게 내버려 놔 달라.

나중에 드러났지만 국정원이 방송장악 문건 여러 건을 청와대와 야합해서 만들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했고 민간인 사찰 조직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져서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게 2008년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로 불리우는 이 정권은 방송을 모질게도 탄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PD수첩 PD들, 작가들 구속되고 체포되고 수년 동안 재판에 시달리고 여기 앉아 있는 저도 그 시간 내내 정권의 탄압에 맞서다가 전과 3범이 됐습니다. 까마귀 고기 삶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좀!

간사님, 제가 방송법 개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논의하시지요. 합의하시지요.

내용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상임위에 와서 언론인으로서도 선배시고 정치인으로서도 선배신 신성범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말씀 중에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한 글자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고요. ‘전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질의 내용들 그 이전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면 몇 년 전 얘기를 하게 되고 몇 년 전 얘기를 하면 또 그로부터 몇 년 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그만두겠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그것 하라고 국회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안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는 것 압니다. 합의를 찾아가 보지요. 어차피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 걸려 있어서 직무 못 하시잖아요. 방문진 이사 교체하는 것 제가 볼 때도 한 1년 정도는 못 바꿉니다, 이제. 그 전에 방송법 개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가 이제는 언론과 방송을 도와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 정말 그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응해서 얘기하려고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는데 정말 좀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 결산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준비하고 오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워낙 방대하니까요.

○이훈기 위원 보세요, 여기 제안설명에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은 2075억 원으로 계획 대비 98.2%를 집행했습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이것 보지도 않고 왔어요? 누가 써 줬어요,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무슨 결산 심사를…… 그러니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통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직무대행이 와서. 방통위의 얼굴 아니에요? 와서 지금 하는 게 방통위를……

그리고 여기에 아까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뭘 강화해요, 예산이 그렇게 적은데?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이 방통위 소관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방통위가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에 예산만 퍼 주고 관리 감독은 문화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아리랑국제방송에 가는 예산이 234억이에요. 그리고 국악방송 64억. 지역방송은 38개사에 45억, 1억도 안 돼요.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안 내고 있어요, 지역방송들은 내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 예산 소관주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썽요, 제가……

○이훈기 위원 그래서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 예산은 문체부 일반회계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여분이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과방위 위원 중에 지역방송이 있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반이 넘어요. 그리고 요즘 지역 소멸 얘기도 있고 지역방송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하고 불일치되는 것 있잖아요, 예산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리고 지역방송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시지요.

○**이훈기 위원** 지금 과기부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 업무도 하고 있어요. 방송진흥정책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주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170억이에요. 지난해에는 300억이었는데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이게 R&D 예산 삭감하면서 여기도 같이 삭감했는진 모르겠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예산이 38억인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로예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안에서 어쨌든 이것도 비효율성을 아마 고려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문인력 양성이 방송기자, 방송작가, 방송PD, 방송기술인의 교육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효율적이 아닌 게 이 예산이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효율이라고 얘기하세요,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당한……

○**이훈기 위원**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0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내년 예산 19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여기 전문인력 양성 0원이잖아요, 지금.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내년에도 0원인가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일단은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것은 반드시 편성해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0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줄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액 삭감을 해요? 이게 방송 현업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이것 반영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여기 10억 원이 지금 됐다고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아까 김현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원안위 질의 준비했는데 그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발표된 EU의 AI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해민 위원 여기서 최근에 위험도 등급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어떤 단계인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항목 하나하나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이해민 위원 원래 3개였다가 4개가 됐어요. 새롭게 정의가 된 부분이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은 인공지능을 쓰면 안 돼’라는, 아예 차단하는 범위고요. 그 바로 아래가 원래 정의되어 있었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위험 영역에 속합니다. 고위험 영역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지켜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2차관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의료, 교육, 법 집행, 이민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교육, 이민 관리? 말이 되지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에서요 마이닥터24, AI 디지털 교과서,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한 확산’이라고 쓰셨는데 고위험 영역에 교육과 의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에 AI에 대한 기술 영역 아마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진흥 위주 정책을 쓰더라도 과기정통부에서는 충분한 보안 기준 달성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은데 확신을 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AI 기본법이 지금 통과 안 된 상황에서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이해민 위원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법은 통과가 되어야지 진행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줄이고 진흥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규제를 계속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해민 위원 안전한 상태에서 진흥 정책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런데 EU는 사실은 우리보다도……

○이해민 위원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교육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 도입하려고 할 때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그냥 ‘네, 네’ 하실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민 위원 기술평가기준이 뭔지, 어떤 메트릭을 쓰는지 명백한 내용을 저는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AI 교과서에 대해서 기술에 관한 것은 무슨 군사기밀같이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교육자는 아니에요. AI 교과서 교육자는 아닌데 다만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기술이 이 단계까지 왔냐라고 물었을 때, 고위험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데리고 모험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공상과학영화 교육 부분 그려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아름다운 AI 교과서 모습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는 방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AI 교육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 부작용은 뭐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AI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서 직접 넣어서 서비스 론칭해 본 입장에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라면 답을 아직은 못 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런 우려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역할을 하셔야 되고 업체 말만 들으시면 또 안 되고 AI 교과서에 대해서 기술타당성, 평가지표 한 사이클 돌면서 현장에서 확인된 검증 결과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효과 확인하고 적용하셔야 하는 고위험·고영향 영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정권, 지금 정부가 겨우 5년짜리 정권이요 대한민국 아이들 데리고 모험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마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우려를 충분히 유념하고요. 단지 지금 상황에서 AI 영역을 진짜 힘차게 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규제를 가지고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과기부장관님, 오전에 질의 때 R&D 성과를 제고하는 방법, 연구개발비 배분 방식이라든지 PBS 제도개선 방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더니 1년 걸리신다고 그러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게 그냥 단순히 대책은 그렇게 걸리지를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안착이 되려면 사실은……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착까지는 바라지 않고 대책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대책의 큰 부분은 구상이 돼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큰 그림은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예, 올해 말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딥페이크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혹시 성범죄자들에겐 전자발찌 뭐 이런 것 채우는 것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사이버상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전자팔찌가 효력이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지금 이게 딥페이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 중에서 이것은 딥페이크에 의한 영상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완도 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범죄자들을 사후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전자팔찌로 가능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썄요, 손을 쓸 수 있는 한 또…… 팔찌는 안 되겠 지요, 또 키보드를 두드릴 테니까.

○조인철 위원 집에서 그냥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그건, 예.

○조인철 위원 그러면 사이버는 사이버로 좀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쪽 을 빨리 인지를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조인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만약에 지금 전과자다, 전과자를 사회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 떻게 또 재범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러니까 그것을 생성하는 쪽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 나요,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요.

○조인철 위원 그런 개발할 의향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우리 과기정통부는 그 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 습니다. 기술적으로 생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거지요.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 시겠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지금 R&D 사업이 진행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 나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게 22년부터 진행돼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는 이게 23년도에서 25년도 총 한 24억 정도 가 투입돼서……

○조인철 위원 내년도까지 그러면 개발이 완료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일단은 그렇게 계획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쓸 수는 없을 거고 어떤 제도적 정비 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정책연구가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EU와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제화하거나 이런 것 없이는 그것 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계시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 정책연구는 진행 중인데 이게 여러 부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하고 방통위하고 여가부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이미 기술개발은 25년까지 가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게 완전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인철 위원 그다음에 그거를 법으로 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지금 정책연구 중이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24년 7월부터 정책연구 들어가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24년 7월부터면 금년도 7월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조인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게 지금 내년 초까지라고 얘기하네요.

○조인철 위원 내년 초까지, 그러면 내년 말까지 기술개발하면 그걸 제도화까지 가능해 지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요.

○위원장 최민희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 현장방사능지휘센터 신축사업 이거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현재 기존에 다섯 개가 있다, 고리, 월성 또 어디어디에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영광 한빛발전소가 있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현장지휘센터를 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저희들이 방재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다섯 개 있고 세 개를 더 만들겠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 있는 지역 중에서 한 10km 정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나면서 대형사고가 나면 이삼십km 이상 오염이 되기 때문에 현장지휘센터가 그 기능을 부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잠깐잠깐, 알았어요. 알겠는데, 현장지휘센터라는 게 뭘 하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원안위 뿐만이 아니고 각 부처의 협력관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는 조직이 운영되는 장소입니다.

○신성범 위원 13년 전의 그 장면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도쿄전력이 얼마나 급했던지 자위대가 등장해서 헬기가 물을 뜨고 주한미군, 해군까지도 등장하고 도쿄 소방차가 다 출…… 이런 모습이 우리도 만약에 일이 한번 터지면 연출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휘센터라는 곳은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고 각 단위들이 모여서 업무를 분장한다 이런 취지일 텐데 이래 가지고 되는 사안인가,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거기에 지금 각 현장에 나가 있는 패넬 위주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돼 있을 테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은 돼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통신은.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센터에서는 뭘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우선 첫 번째로는 거기 장소에 저희들이 구호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사선 방호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신성범 위원 잠깐, 거기서 장비라 함은 지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장비와는 별도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범 위원 수준이 다른 건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그렇지는 않고요. 장비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지역에는 현장지휘센터가 마련되지만 중앙에는 중앙대책본부가 마련이 됩니다. 그 중앙대책본부하고 현장사고의 연결이 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서 현장에 관련된 모든 지휘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성범 위원 지금 원전 근무자들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까, 훈련이나 연습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들 방재훈련이 연간 10회 이상씩……

○신성범 위원 그러면 레벨이 다르니까, 아니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는 걸 합니까? 실제로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러니까 활동 범위와 관련해서는 한수원 사업자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부터 저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연합훈련까지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예를 들어서 1호기, 2호기가 다운됐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동선도 알고 실제로 훈련을 하시냐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소개훈련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쭙보느냐 하면 이게 아무리 연습을 하고 하더라도 현장에 닥치니까 꿈쩍 못한 게 일본 사례예요, 일본. 일본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도 정확하고 할 터인데 꿈쩍을 못했잖아요. 손들고 있다가 수상까지 다 날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장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현장 근무자들은 대피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한수원 발전소 자체에는 또 다른 비상조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다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이 더 강화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안전대책 이런 것을 혹시나 들어 보셨거나 가서 묻거나 같이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내 원전도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후쿠시마 사고 사례에서 나타났던 방재의 문제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 이런 것도 대응하고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위원님 말씀 주시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다음의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신성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봇이 준비될 정도로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러니까 로봇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발전소가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난 이후의 조치라서……

○신성범 위원 아니, 사람이 못 들어갈 때, 어떤 방재복을 입어도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을 때. 일본도 머뭇거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수배를 할 정도로 하냐는 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한수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저희들은 안전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제가 언론사 특파원 시절에 체르노빌에 가 봤는데요. 체르노빌……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면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래요. 3분 주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3분 더 드리세요.

○신성범 위원 체르노빌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 보고 느낀 게 지금 가시면 지금도 똑같은 터인데—제가 10년 전에 갔으니까—거대한 석관이에요, 석관. 얼마나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관 안의 석관. 원래 개들 표현이 그래. 석관이에요. 콘크리트관에다가 그냥 묻어 댔어요.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 놓고 안에서는 괴물이 숨 쉬는 것처럼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르노빌 동네는 프리피아티인가? 엉망이 돼 있고. 제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방서에서도 훈련 많이 한다고 하지만 뛰어 내리다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하고 다른 것들이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지하게 이런 방사능 시설에다가 그렇게 건물 짓는 것하고 그럴싸한 시나리오 마련하는 것 외에 진짜 현장 직원들에게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어디서 점검을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행안부랑 동시에 안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신성범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이 터지고 나면 거의 완전 손을 못 쓰는 게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줌…… 원자력 전문가시겠지만 또 재난 전문가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당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울진이나 영광이나 고리나 소방서 하고는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것 파악은……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저희들 역할이 나뉘져 있고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에서도 그 관서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합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울진소방서나 영광소방서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연결돼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게 터졌다 그러면 앵앵 달려와 가지고 화학차가 온다든지 그런 게 다 매뉴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매뉴얼도 돼 있고 각종 연락처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12초나 남았는데……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유상임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체를 위해서 영구정지된 원전은 전 세계에 20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1개만이 지금 완전 해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된 원전 중에 어떻게 보면 10% 정도만 완전히 해체된 것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무래도 해체가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박충권 위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를 포함해서 한 6개국 정도가 원전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한 기술개발이,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 정도밖에 해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리·월성 1호기가 해체 준비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향후에 90여 년 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가 영구정지 중인 원전의 해체와 2030년 이후 운영 정지 원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을 2022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해서 원전해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선정된 연구개발 기관 중 하나가 취소된 일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2023년 1월 사업 수행기관이었던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제안요청서를 보게 되면 중수로 해체 특수폐기물 물리화학적 분리/감용 및 안정화 기술개발만 특기사항으로 해서 주관기관을 산업계에서 총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업공고문하고 과제 제안서의 해석이 모호하다 보니까 과제 제안요청서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장관님, 해당 사업공고문하고 과제 제안요청서의 요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공고가 이루어진 셈인데 공고가 나간 이후에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것을 정정할 기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때 이런 차이를 인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것은 정말 관리 미흡과 방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신청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미선정되었던 경쟁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을 알아차리고 연구재단이 과제 선정 과정에서 행정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지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였고.

사실상 과제가 한번 선정되고 나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기부도 과제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장관님, 정부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주관기관인 과기부의 정말 망신살이 뻗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수행기관인 연구재단이 R&D 과제 선정 시 제안요구서에 제시된 자격요건의 부합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이차적으로는 선정 평가와 평가 결과 확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기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국가 R&D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됐는데 이에 대해서 신임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분명히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연구재단이 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너무 중요합니다. 원전 해체에 있어서 R&D가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방송 정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송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이공계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사실상 방송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 눈에도 정말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정쟁하고 있는 정치권의 의도가 보입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제발 이제는 정쟁을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지극히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우리 과방위가 정말 방송 정쟁으로 소진한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니까? 1분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2분 드리세요.

○한민수 위원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이 붙어야지요.

○박충권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 안 하면 3분 드릴게요.

○박충권 위원 1분만 주시면 됩니다.

○최형두 위원 3분 해요.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요, 간사님의 이해관계와 좀 다른 것 같은데 3분 하실래요, 그냥 1분 하실래요?

○박충권 위원 1분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3분 해요. 과학기술 이야기 좀 더 하세요.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3분, 1분? 3분?

○박충권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3분 드리세요.

○박충권 위원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개입 최소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바꿔 가면서 정쟁을 반복하는 걸 이제라도 멈춰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한시가 시급한, 향후 100년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에서 더 이상 정쟁 멈추고 과학기술에 집중하는 그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MBC라든가 공영방송 중의 하나는 민영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영방송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따가 추가질의하세요. 1분밖에 안 쓰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 김태규 직무대행님, 어제 딥페이크 피해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쪽 말씀을 드려 왔는데 지금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관계부처나 수사당국하고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게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공약이 있으셨어요. 디지털 성범죄 막겠다, 전문요원을 고용하고 영상물 삭제 지원하고 플랫폼 처벌 근거도 마련하겠다, 비협조 플랫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텔레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해당 텔레방에 들어갔더니 연락처, 학번, 사진 다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특정 학교의 피해 여성은 한 학교 안에서만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불법 합성물을 본 가해자가 1200명이 넘어요. 이것은 사람을 간접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더니 경찰은 수사가 미비했고 방 개설, 그러니까 텔레방을 개설한 주범이 잡히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되었어요. 그리고 방심위에 신고를 해도 해외에 개설된 SNS라 조치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과거에 받았답니다.

소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법치에 또 국민의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겠다고 대통령이 되셔서 n번방 사건 2년을 맞이해서 획기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행한 게 도대체 뭔가, 그동안 수년이 지났는데 왜 텔레방에 대해서, 텔레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통위는 텔레그램사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방통위가 텔레그램사하고 말씀이십니까?

○**김우영 위원**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글썄요, 특별히 텔레그램사하고는……

○**김우영 위원** 방통위가 하는 업무가 정보통신망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하는 업무예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법 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이행 점검 등등등등…… 방통위의 업무예요, 이게. 그 불법 유통정보가 돌아다니는 SNS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방통위도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메일로. 이래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도모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님께서 딥페이크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어떠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범죄기 때문에 수사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러한 수사당국이나 관련 부처와도 저희들이 같이 애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 혐오 또 국내에 개설되지 않은 SNS를 통한 그런 우회, 이런 데 대해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 방심위, 법무부나 경찰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국민의 인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까 조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비슷하게 하셔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시다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술적으로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유통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가부가 주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그래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이런 정책 연구를 여가부와 합동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부처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물론 이 이후에 이렇게 돼서 포착된 사람들에게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 법적인 단속은 그 이후로 같이 병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위원장님, 진짜 짧게, 어떤 정쟁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 김현 위원이 회의 내용과 관계없

이 저에 대한 고소 관련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현 위원님께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백한 무고이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과 사법부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장님 안 계실 때 한 가지,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인앱결제 관련해서 구글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까지 딱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금 아마 계속,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일단 완전히 종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여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는 맞습니다. 마무리 단계는 맞고 종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위원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결을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저는 좀 안타깝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을 시키는 것을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최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트래픽에 맞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메타, 디즈니 등 대부분 모든 국내외 CP들이 망 지급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구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참고로 보시면 어쨌든 국내에서 해외로 연결할 때 트래픽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망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 지금 구글이 우리나라의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5.5%, 메타 4.3%, 오히려 네이버가 1.7%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이것에 대해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서 누가 봐도 국내 기업과의 아주 불평등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이해민 의원님하고 김우영 의원님께서 망 사용료에 대한 법안을 이미 발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들 간의 거래 이슈이기도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도이치텔레콤이 메타하고 망 사용료에서 최근에 승소를 해서 310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지금 대체로 망 이용대가에 대한 각 나라에 여러 분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의 망 분쟁은 그 지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또 아시다시피 사업자 간의 문제라서, 또 거기다가 이게 국내의 CP와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논의 동향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국내외 통신시장 또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국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최수진 위원 오히려 지금 구글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도 8조 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장관님, 계속 장관님께 질문하게 되네요.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모두발언에서 AI 분야 관련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다시 환기해 드리면 AI 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AI가 산업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인공지능 챌린지 선도기술 개발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 내용을 이제 취임하신 지 아직 한 달 안 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예산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23년도도 100억 원 집행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에서 우수 연구팀을 선발하는 데 한 40억 그리고 후속 팀에 대한 후속 연구로 60억 원 책정돼서 잘 진행됐던, 2년 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 예산은 얼마로 깎였는지 혹시 대충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지금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박민규 위원 당연히 모르실..... 그렇지요.

그런데 100억, 100억 했던 그 사업이 14억으로 깎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40억이었던 게 2억으로 깎이고 그다음에 후속 연구 지원이 60억인 게 80% 깎여서 12억이 됐어요. 물론 인프라 구축은 2년에 비해서 계속했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깎인 게 이해가 되지만 인공지능 챌린지 대회에서 정말 환경 구축해 가지고 뽑았

던 연구에 대해서 선발된 연구의 후속 사업이 80%나 깎이게 된 거지요.

사실 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인공지능 챌린지를 위해서 컴퓨터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내용연수가 5년짜리예요, 5년. 5년인데 2년 구축해 가지고 1년 쓰다가 갑자기 예산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과연 그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월드컵 개최할 때 전용구장 만들어 놔다가 월드컵 경기 취소한 것과 같은 정도로 매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도리어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AI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AI 관련된 연구비가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또 조그만 콘텐츠를 가지고 AI를 붙여 가지고 너무 많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힘을 모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구조 안에서 이 연구개발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AI 발전에는 큰 기여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편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런 접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국가 R&D에 대한 중요한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우리 전략기술 관련된 R&D 계획도 거창하게 발표했다가 그것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처럼 AI라고 하는 그냥 되게 이름이 그럴싸하지만 사실 실제로 연구 성과를 보면 그것이 파편적이고 과연 활용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R&D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하는 것이 기초 국가 R&D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AI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크게 된 대영역의 연구이지만 과학기술과 국가 R&D로서 계획을 갖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안 이미 나갔겠지만 향후에, 내년도에 다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과학기술부 내에서 예산 내 여러 가지 권한을 활용해서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장관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AI가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재생산돼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계획을 갖고 국가 R&D, 특히 AI 분야에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오늘로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는데 우주항공청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금 새로운 5인 체제, 방통위 5인 체제의 복원이야말로 방통위나 여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는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 답변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저는 어쨌거나 방통위원 임명 과정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것처럼 7개월 동안 그것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이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정치권의 눈치 보느라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아서 방통위 5인 구성의 복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헌법재판소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은 탄핵 소추를 했던 민주당과 야당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발사체, 인공위성에 대한 꿈 이계, 우주경제라는 것이 참 우리 국민들 마음을 부풀게 하고 누리호 발사 때마다 큰 기쁨을 느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과 발사체 제작 때 구성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남의 경우에 위성 특화단지가 되어 있고 또 우주항공산업의 70% 정도가 집적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인공위성 제작 시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즉 KPS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나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입장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우리나라에서 위성이나 발사체 국산화율을 높이려는 그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발사에 성공한, 22년도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에 있어서만큼은 국산화율이 한 95% 됩니다. 발사체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은데 현재 인공위성의 국산화율은 상대적으로 그것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국산화 비율은 한 50%에서 한 70%가 위성의 국산화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 위성사업을 통해서 국산화율을 상당히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형 KPS라고 하는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에 있어서 국산화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아직 시작한 지, 단계별로 보면 아직 첫 시작 단계라서 국산화율은 좀 낮은 편인데 이 사업의 어떤 종료 시점에 가서는 그 사업에서 개발된 위성조차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우주 분야 산업에 진출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약 92%의 기업이 우주산업 분야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입니다. 또 91%의 기업이 전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데 물론 우리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지금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체가 아예 없는 경우라거나 또는 기술 및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는 해외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주경제를 함께 키워 나가기 위해서도, 특히 위성사업 이런 데서는 인공위성의 구성 부품…… 지금 우리 대학에서도 인공위성을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나오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8월 달에 들어가서 2023년 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이 어떤 행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현장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관계로 정부 조직 개편을 못 했고 사실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공작이 진행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TV조선 점수 수정한 사건을 두고 담당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50여명의 방통위 관계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지난 방통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 측 증인과 참고인이 100여 명에 가까워서 이 재판은 시대의, 세기의 재판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EBS 이사의 증언입니다.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른다 합니다. 현재까지 방통위 직원 중에 30여 명이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언제 불러 갈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5일 동안 단식을 했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당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의 폭거에 저항하기 위함이었고 방통위에 의한 검사 감독권, 감사원에 의한 감사, 당시 방문진 직원은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검사 감독권과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면 직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조사를 했던 것이 당시 방문진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겠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국장님, 이용자정책하고 붙어 있었지요?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지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같이 붙었지요, 지금 조직 개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예전에 이용자정책국……

○**김현 위원**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국장으로 같이 붙여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훨씬 업무가 넓어진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이용자정책국과 시장조사국이 분리됐습니다.

○**김현 위원** 어쨌든 이름은 이용자정책과 방송통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시장심의관은 따로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방심위를 통해서 대형 음란 사이트로 문제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어떤 사이트요?

○김현 위원 방심위의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김현 위원 34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김현 위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계신 그 과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김현 위원 거기서 제가 어저께 방심위 관련해서 유해정보 딥페이크와 관련된 것 과 방위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방통위가 협의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오늘 이 역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담당 과장을 불러야 되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저희들 과기부하고는……

○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통위가 방발기금을 가지고 방심위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확인하고 오셨는지 묻는 거잖아요. 확인 안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사업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대강 알고 오는 그런 자리입니까, 지금 국장님?

들어가지고요, 내일 다시 올 때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오십시오. 상투적으로 잘하겠단 이런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 n번방이 있었을 때 방통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춰 보시고 지금 방심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방통위가 무엇을 못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일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정확히 알고 오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고요. 과방위 어저께 현안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과학기술정보부장관님하고요 방통위 직무대행님하고 빨리 협의를 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그래서 내일 방통위 직무대행께서 내용 파악 못 하겠다는 그런 어설픈 답변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대비해 가지고 내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하겠습니다. 5분 주세요.

김태규 대행님, 김효재 위원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김효재 위원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전에 방통위 위원장을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성은 처장, 어디 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들으셨지요? 지금 어디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방금 대답을 하네요.

○위원장 최민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방통위원을 하면서 무리한 방송장악에 기여한 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요.

황성욱 위원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지금……

○위원장 최민희 기억 안 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특별히 뭐…… 지금 아마 임기는 다 된 걸로 알고요.

○위원장 최민희 임기 다 되고 어떻게 됐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이사로 지금 선임이 돼 있지요, KBS 이사로.

○위원장 최민희 예, KBS 이사 선임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요, 황성욱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방송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심의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KBS 이사가 된 거예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 생각 못하시고 그냥 따라서 선임하신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방송사들 보도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한다 만다 결정하던 사람이 KBS 이사가 돼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이진숙 탄핵 심판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가 법리에 입각해 정의롭게 결론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고 묵묵히 기다리고 현재 심판과 관련하여 저희가 할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김태규 대행, 방문진법 6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방문진법 6조는 임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 2호에 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통위원회 입장은 있을 수가 없지요. 방통위원회 회의가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회가 회의가 없어서 속기록을 못 주시겠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다 대행 개인 의견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제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개인 의견이 현실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부분은 뭐……

○위원장 최민희 방문진법 6조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방문진 이사와 이사장은 MBC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MBC는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1위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시청률 그리고 지상파 방송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들은 매우 유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거 세워 보세요.

지금 그 말 왜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했습니까? 제가 질문했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앞에……

○위원장 최민희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 재판정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 최민희 지금 기상천외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시작하세요.

지금 대행께서 방통위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방문진 이사 등부터 후다닥 하시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조성은 처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은 방통위 설치법 안에 들어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를 따로 방송통신심의위법으로 만들지 않고 방통위 설치법 안에 둔 이유,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그 취지……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잘 알고 계시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나왔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실제로 오셔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 감사하셨잖아요. 진두지휘하셨잖아요. 살살이 되져 가지고 카드 사용 횟수에 제일 문제도 많은 황성욱 위원은 그냥 보호하고 횟수가 적은 정연주, 이광복, 그 두 분은 물러나시게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때로는 방통위가 독립기구라서 우리가 관여 못 한다 그러

고, 마음에 안 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쫓아낼 때는 강도 높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무슨 뭐……

○**위원장 최민희**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서 보충질의까지, 재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신 위원님들 제외하고 추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손 안 드시면 안 드립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 다인데요, 한 분 빼고.

그러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10분 정회하고 재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장관님, 아까 딥페이크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기술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까 제가 기술명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인지를 하는……

○**조인철 위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일종의 프로그램이지요, 예.

○**조인철 위원** 프로그램을 성범죄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탐지하는 과제입니다.

○**조인철 위원** 거기에다 깔아 놓는 거예요, 일종의 스파이웨어 같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

○**조인철 위원** 2차관님이 잘 아시는가 보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 영상 자체가 실제 영상인지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인지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이버범죄, 성범죄자를 어떤 전자발찌를 채워 놓는 것처럼 해 놓는 것은 아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지금 R&D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의 영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디텍션 기술입니다.

○**조인철 위원** 영상이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했을 때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술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고는 그러면 약간 다른 거네요. 저는 사이버상에서 아닌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인가 이렇게 채우잖아요, 사후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사이버상에서도 사고를 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또 그런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거나 이런 방식이 없을까라고 해서 여쭙어본 건데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여기서는 그런 게 생성된 것을 탐지를 하면 방통위에서는 그걸 지울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고 이것을 누가 자꾸 발생시키느냐 이것은 수사 차원이니까, 여기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조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 차원이 아니고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이미 저질러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원래 채우잖아요, 사이버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로 사이버상에서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현재 딥페이크 기술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굉장히 논의가 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영상을 담아서 새롭게……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될 텐데 그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3분 하시자고 했지만 너무 짧지요? 5분으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분 더 드리세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 기술이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기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좀 검토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 범죄경력자에 대해서 스파이웨어나 깔아 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거냐 마는 거냐, 어떤 개인을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 기술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제도 문제일지 또 바로 답변하기는 뭣하고 장관님 상의드리고 지휘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25년까지는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가 25년까지 기다려서 어떤 제도화하고 기술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모바일 앱 결제 저도 많이 그런 경우 당했는데 무료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무 신고도 없이 그냥 계속 연장해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 2억 4000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과기부인가요, 아니면…… 과기부에서 쓰시는 거지요,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권고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조인철 위원** 방통위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방통위 소관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방통위에서 하시는 건데 이것 권고해서 실적은 개선된 경우는 절반도 안 돼요, 계속.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점검 좀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정훈 위원님 안 계셔서 한민수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구를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제 가지고 잠깐만, 딥페이크 기술, 성범죄 이런 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방통위 직무대행에게 잠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오늘 말씀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기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렇게 텔레그램, 특정 앱의 이름이기는 합니까마는 우리 국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삭제할 한다든지 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장관님 안 되시면 차관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방통위가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좀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n번방 그때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기에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예전에 같으면 ISP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민수 위원** 가까이 좀 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처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그 특성상 그리고 익명성 자체 보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게 범죄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화되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성들 피해를 본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명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합심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 앞서 질문드렸던 것 중에 장관님, 우체국 보니까 우체국보험 적립금이 관리나 운영 주체는 국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데 아까 법리적인 말씀들을 얘기는 죽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2500억 원이 왜 필요했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마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들었고……

○한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면목 없습니다. 기금 사정이 굉장히 20년부터 안 좋아졌습니다. 지출이 많았고 수입 문제는 주파수가 주요 문제인데 주파수 문제에 대한 수입 문제가 좀 어려웠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재정법상 우리가 세출만 생각하는데 세입에 있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여유자금의 일부를 예탁했던 부분을 쓴다 하더라도 부족분이 2500억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 이게 차액이 꽤 크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들어온 건 한 40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게 판단이 되고 예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님 앞서서 디지털배움터, 저는 이 사업은 줄일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장관님이 잘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고령층을 상대로 한, 아까 사례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피싱 이렇게 실제 배워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산도 많이 깎였고 지역도 거점이라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137곳 중에 4개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증액될 부분들 좀 넓혔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걸 굉장히 여러모로 국민 편익을 위해서, 특히 소외계층 분들 또는 연로한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효한 사업이라는 것이……

○한민수 위원 입증이 됐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래서 이제 유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규모를 검토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예, 그 말씀대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런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률도 좋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디지털 소외 부분, 고령층에 계속 좋지 않더라고요, 수치상에도. 그러니까 꼭 살펴봐서 보장이 되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유국희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안위 언제 출범됐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2011년에 출범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되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원안위는 2013년 태생부터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원안위가 현 청사에서 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청사 이전 협의 없이 계약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원안위 청사 지방이전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시정요구도 있었는데 시정요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저희들이 관계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주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원안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정부청사 공실 및 입주 가능 여부를 행안부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 청사 이전이 결정되면 관련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 지적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원안위도 2021년 5월 청사 이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원안위 이전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황정아 위원** 원안위가 지방이전을 미적대는 사이에 임차 비용으로 공중에 흩뿌린 국민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10억 9839만 원입니다.

원안위가 현재 매달 내는 월세가 얼마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1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1억 1759만 원이고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원안위가 지출한 임차료는 74억 원이고 원안위가 청사를 옮겨 다니면서 쓴 이전비까지 합치면 96억 원에 달합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터지면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KINS에서 원안위로 최근 5년간 8364번 출장을

갔고 출장비만 10억 6563만 원을 썼습니다. KINS 이외에도 원자력 안전 관련 유관기관들이 대전에 집적, 다 몰려 있지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같은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모두 대전에 있는데 이 세 기관과 원안위의 상호 출장 횟수가 최근 5년간만 1만 1786번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만 총 14억 2000만 원이 들었지요. 원안위가 지방이전을 미뤄서 허공에 지금 버리는 세금이 110억 원이 넘습니다. 소극행정의 대가로는 너무 큰돈이지 않습니까?

방사능 유출 등의 원전 사고가 터지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원안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으로의 이전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어물쩍 작년에 임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미 3년의 시간을 벌었는데 매달 1억 원씩 36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들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방이전을 미루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거고 원자력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속히 이전을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출연연의 1인당 경상운영비 편차가 굉장히 큼니다, 기관 간에.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영도 못 한 채 거의 수년간 경상운영비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출연연에서 이걸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경상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장관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곧 출연연 원장님들과 만나고 또 각 연구기관이 시급히 시정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아마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러면 경상비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마련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 유상임 장관님,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통신 조희,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으시고 법원의 사전허가 요건 신설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 자료 이것 맞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 보시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 이루어진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건수가 26% 더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자료가.....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과기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맞습니다.

○김장겸 위원 지금 보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현황, 왼쪽은 영장이 불필요한 것, 오른쪽은 영장이 필요한 것 이것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 검찰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정원하고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건수는 연평균 567만 건이 훨씬 넘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2022년·2023년 통신 조회는 연평균 448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26% 더 많았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것 알려 주지도 않았지요. 이것 통신 조회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은 언제 시행이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23년부터인가요? 22년 아닌가요?

○김장겸 위원 22년부터 시작……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알려준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작년 12월이라고 그러합니다. 올해부터네요.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엄청나게 조회를 했는데 그 내용도 알려 주지, 제도상 그렇게 돼서 그렇겠지요. 알려 주지도 않았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언론이 보도한 것에, 다음 장 내보내 주십시오.

통신 사찰 프레임을 띄운 것은 이걸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언론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수긍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민한, 어쨌든 황정아 위원님께서 22년·23년 데이터를 보여 주셔서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앞서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 왔습니다. 왔는데 건수는 훨씬 더 전 정권이 많았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저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회를 당한 것 맞아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겨우 검찰에 조회당한 것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분야 이게 지금 우리가 2018년 기초연구 분야 지원금이 예산은 2018년도에 9718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 올해는 2조 1179억 원으로 2배 넘게 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김장겸 위원 그런데 이게 2배로 늘었는데 그런데 SCI 논문 평균 실적 수준 이것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 이렇게 들입다 붓고, 당장 드러나는 건 예산 넣었다고 당장 성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연구과제의 성과가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으면 어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예산만 부을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렇습니다. 기초연구 중에서도 이제 과학이나 기술이나에 따라서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제일 잘 하면 노벨상을 바라보고 이런 건데 여기에는 좀 굉장히, 옛날 같으면 번뜩이는 20대에 노벨상을 탄 사람도 많고……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런데 논문 피인용도 이런 것 보면 겨우 15위에서 10년 간에 14위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피인용도는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인데 사실은 더 우리가 계속 논문의 질적인 면을 다루는 부분은 기초연구 중에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쪽의 기초연구가 평가를 잘 못 받는 이유는 기술이 산업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이 지수를 올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장겸 위원** 기술의 사업화? 산업화가 아니고 기술의 사업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화가 되어야 이제 사업화가 되는 거니까요.

○**김장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질의에 앞서서 답변에 뭐라고 할까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혹시 체크가 가능하신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2017년부터의 통신 조화……

○**위원장 최민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 확인 중입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장관님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아까 본 그 데이터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의 수치가 적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그 이전 데이터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높아 오던 게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가면서 줄어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드러나 있는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그 현상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반기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김태규 직무대행께서도 앞선 질의에 대해서 그냥 수궁을 하시는 듯이 넘어갔는데 TV조선 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 사건 결론 났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노종면 위원**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형식의 발언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 그런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좀 그만하세요.

○**최형두 위원** 자기 발언시간을 쓰든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뭘 어떻게 합니

까, 지금 회의가 자꾸 늘어지는데.

○**노종면 위원** 하나하나 제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팩트에 관련된 거니까요.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2분 그리고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장겸 위원님의 지적이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노종면 위원님의 문제 의식도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자료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그 문제를 제기하신 박정훈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관련해서 다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제가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팩트 확인과 관련된 것은 질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예. 지금부터 쓰십시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쭙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노종면 위원** 앞서서 장관님께서서는 통신요금이 많이 높지는 않다는 입장 밝히셨고 오늘도 그 입장을 유지하셨고 차관님께서 평가기준, 바스켓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조건들을 모아서 그것 가지고 높다 낮다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합들이, 기준의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과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대입된 조사 결과들을 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 이런 게 아니라……

PPT 하나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BEREC이라는 아까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EU의 공식기관인데 저기서 12개의 평가 조합 방식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8개에서 한국이 1위로 나오고 나머지 4개에서도 2위로 나옵니다. 지금 1기가 쓰는 것, 5기가 쓰는 것, 10기가 쓰는 것 또 전화하고 조합한 것, 1기가에 30콜 이것 이외에도 50기가에 300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한 것에서 다 상위권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무 부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이 타국에 비해서 비싸다는 전제가 있어야 조금 더 낮추려는 노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런 데이터가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용을 해 주시고 거기에 기반해서 정책을 입안하셔야 그게 힘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청문회 때 우리 장관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있다 그래서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이것 한장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종류의 자료로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닙니다. 장관님께 그 자료를 보고드리면서 이게 유일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게 다 정답처럼 이렇게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다른 것, 그러니까 갖고는 계신 거잖아요? 제가 제시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저희 좀 보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격을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지금 알뜰폰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알뜰폰이 요금제가 썸에도 불구하고 왜 고객들이 안 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마 알뜰폰이 제공을 못 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이 안 된다고, 결합 할인도 잘 안 되고 서비스가 조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것들을 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지금 다른 통신사들 망을 빌려서 쓰는 건데 다른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버금가게 한다면 사용자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표적으로 알뜰폰 젊은이들이 많이 쓰시던데 해외 로밍이 되게 불편하대요. 해외 로밍을 하려면 기성 폰들은 그냥 앱에서 다 하는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객센터가 거의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고 그래도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실태들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사용은 늘어난다.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알뜰폰 그러면 뭔가 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서 갖고 다니기에 좀 창피해 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서비스의 질만 높이면 분명히 경쟁력 있는 대안 상품이 될 수 있겠다. 거기에 더해서 알뜰폰의 독자 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던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2차관님이 대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의미 있는 도매대가 문제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빌려서, 낮은 가격으로 빌려서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실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언제쯤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저희들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의견 수렴을 끝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끝이면 연내에는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해야 됩니다.

○**노종면 위원** 연내에는 해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법을 주실 때 도매대가에 대한 것은 상시화해 주셨습니까마는 도매대가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로 내년에 현재까지는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나중에 저희들 검토와 내용이 끝나면 그다음에 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거기까지 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아까 마무리를 잘 못 해 가지고요……

김태규 대행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훈기 위원** 아까 방발기금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와 논의 채널을 갖고 논의해서 가지고 2025년 국회 예산심사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이훈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이 거의 한 300억을 쓰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리고 이 300억을 갖고 지역·중소방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하고 예산 지원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소관 불일치 문제가 있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모양입니다.

○**이훈기 위원** 보니까 결산 여기 감사유형에 시정에 해당돼요.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아까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거기 직원분이 다른 예산이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존에 현업인들이 한 37억 정도 교육에 사용하던 것하고 다른 성격인데 이걸 원상회복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수천 명이 이 교육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게

기재부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반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유념하고, 지금 25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 성격이 좀 달라요. 정확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빌리지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하는 건데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올해 같은 경우에 78개 지자체에 99개 과제에 한 1000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고 과제도 10개밖에 안 되는데 급격히 늘어나고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지역특별회계로 옮기면서 사업관리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가 디지털 전환 촉진 사업에서 여기 세부내역에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이게 관리 예산을 쓰는데 이게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결산심사 관련해서 시정사항 같은데 이것도 좀 유념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어 문제 생겨서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인해 많은 피로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가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김태규 대행님, 이것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나요? 이렇게 보고하신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요, 대통령님께서 하신……

○이훈기 위원 제가 보니까 방통위원회 얘기인데?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이훈기 위원 대통령이 이런 것들 그냥 알아서 파악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방통위원회에서 누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르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청와대에 보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와서 대통령실이 댔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 저 보고를 안 드렸다니깐요.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이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과기부는 이렇게 보면 업무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조직도 잘 되어 있고. 그렇지만 방통위 정말 엉망이에요. 여기 와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것 아닙니다.

○이훈기 위원 이런 얘기를 하실 입장이 안 돼요. 조직이……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안 드렸다니까요.

○이훈기 위원 와서 대행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아는 내용이 없잖아요. 기본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님,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오해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위치에도 있지도 않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 바로잡아 주세요, 방통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글썄요……

○이훈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참고적으로 조금 전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실장이 ‘방통위에서 직원들이 심리치료 등을 호소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통령께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김태규 직무대행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저는 이창윤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연을 또 이 자리에서 한 번은 제가 꼭 얘기하고 가고 싶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PBS 연구제도에 대해서 모든 출연연이 지금 뭔가 고쳐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기부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BS의 문제점을 보면, 오히려 좀 도전적이고 뭔가 해 보자고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하였으나 결국 결과론을 보면 연구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없고 너무 단기 성과에 매몰되고, 또 지금 제가 최근 통계자료를 보니까 5억 이하의 작은 과제들이 훨씬 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이라는 것은 단체 연구가 중요하고 융합의 연구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것들이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건비는 안 늘고 비정규직들이 계속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연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고 또 과도한 학교와의 경쟁, 산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원천 연구 수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PBS가 낳은 장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관님이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수진 위원 개선할 의지도 있으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그동안 저희들도 PBS가 초래하고 있는 그 연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건비 비중을 높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 왔어요. 그리고 또 소규모 소액 과제로 인해 가지고 역량이 분산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 미션 중심의 과제를 연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왔습니다.

○최수진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자체 PBS로 하는 게 거의 60% 수준으로 5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만 출연연에서 결국은 인건비를 대고 나머지는 돈을 따 와야 인건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사실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인건비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수주하는 경우는 지금 출연연 빼고는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주머니에서 내나 이 주머니 내에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연구를 하고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가면 좋겠다. 좀 도전과 혁신의 그런 연구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소의 자율적인 운영하고 책임과 권한을 좀 주면 우리가 하겠다. 너무 이게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서 픽스된 걸로 뭐 6년 정도 짜 가지고 그것에 맞춰야 되고 원장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이런 것에서 좀 경직성을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고요. 제가 최근에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연구를 했고.

또 연구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센티브도 없고 연구원들이 지금 학교로 빠져나가고 산업체로 빠져나가고 해서 지금 연구인력에 되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블록펀딩 운영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과기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질이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블록펀딩 부분은 연구의 자율성과 그리고 기관장의 리더십을 저희들이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장기적으로 예산 구조를 블록펀딩 구조로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 유상임 장관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강조를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블록펀딩이라는 부분들이 재정 당국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형 과제에 대한 유연한 어떤 연구비 비목 변경에 대한 자율권을 기관장님께 드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황정아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경상운영비 10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상운영비가 어디다 쓰시는지 아세요? 공공요금, 사무실·시설 유지·보수공사. 지금 물이 새는 연구소가 제가 파악해 보니 한둘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기료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컴퓨터 사용하고 서버 사용하면서? 그리고 공공복지에 대한 이야기들, 진짜 저것은 살림살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어렵지 않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예, 위원님. 어쨌든 운영비는 실소요경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건 피해자 2명 아직 치료 중인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이해민 위원**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원안위가 이런 장비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방사선 피폭 재해 방지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사고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서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법 제56조에 따라서 정기검사한 결과인데 지적 0건, 권고 0건, 수검자세 5점 만점으로 합격입니다. 원안위가 내린 결과고.

그런데 정기검사 결과의 방사선 안전문화 부분을……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안전관리자 고용 또는 전담조직 운영은 안정적인가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라고 검사자가 기재했는데 평가 의견에는 관리자에 대한 잦은 변경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규제 제도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고 있나—좀 글씨 크기가 작기는 한데—절차화·문서화가 되어 있나, 연 1회 이상 점검 수행하나, 개선활동을 했는가에서 모두 ‘아니요’입니다.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종합의견에서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3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해도 없고 절차화도 개선되어 있지 않고 취약점 개선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고가 난 기흥사업장은 검사 지적 시 권고사항이 단 1건도 없이 합격을 받았습시다.

다음 슬라이드요.

삼성 수원사업장·기흥·종기원 다 합쳐서 권고사항이 1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허가사용자 정기검사는 사실은 형식적으로 서면 자체 검사로만 커버가 되고 있었어요.

전체를 볼까요? 지금 1만여 건의 인허가가 나 있습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안전관리상에서 허점이 아무래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이랄지 아니면 더 작은 기관에 다니는 분이랄지 이런 분들 원안위 허가에 대해서 믿고 일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전수검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안전관리는 아무래도 사고 예방에 투자가 꼭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에 걸맞게 잘 살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해민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인데 장관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돼서요, 다음에 해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감사합니다.

○이해민 위원 장관님, 이번 삼성전자가 이 재해에서 문제가 발생한 XRF 장비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마 서울대학교에서도 45개 장비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허가난 데 보니까 교육기관이 406건, 연구기관이 439건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기관 실험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 연구소 연구자들 안전 살피셔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연구실에 있는 분들은 더 안전 사각지대, 기업에 계신 것보다 더 안전 사각지대에 계신 것 같고. 해서 이미 삼성전자 피폭 사태 보셨듯이 과기정통부는 원안위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그래야지 우리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연구실 연구자들에게 일을 위한 일 시키는 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경 조성에 좀 더 포커스해서 과기정통부가 함께 직접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섬세한 행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연구개발자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첨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예. 이해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겹쳐히 저희들 받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하고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방사선 동위원소나 발생장치의 인허가를 해 준 기관이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신고기관이 8600개쯤 되고요. 허가기관이 한 1500개쯤 됩니다. 신고와 허가를 저희들이 나누는 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중점은 사실 허가기관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기검사, 기흥사업장의 정기검사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고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신고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라도 신고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또 하나는 신고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신고했다가 폐업했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속에서 또 말씀해 주신 작업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건 관련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민 위원 예, 그리고 과기정통부하고도 같이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잠깐 언급드리면……

○이해민 위원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제가 재직했던 데가 서울대니까 상당히 안전교육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해서, 선진국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제가 죽 학교에 재직하면서 지난 삼십여 년 들여다보면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은 최고 선진국 레벨은 도달하기는 조금 갭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위에서 좀 더 그런 미비한 부분을 살펴야 된다 여기에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질문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름 정리하신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뭐 일본에 쓰는 것이든 네이버가 아마 주된 주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 문제인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쓰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한국 거니까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정보 유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정현 위원 됐습니다.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 그런가요?

○이정현 위원 예, 그렇게 죽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말이지요.

저는 이게 단순한 한일 갈등을 넘어서서 말이지요 AI 시대에 데이터 안보 전쟁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일본 정부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라인야후의 일본의 이용자수가 말이지요 9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라인야후가 월간 이용자가 1억 명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라인의 지배구조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한 2억 명 정도의 시장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요. 데이터 안보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물론 노력해야지요.

○이정현 위원 현재 윤석열 정부와 과기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올해 공식 발표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계획들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별도로 듣고 있지 못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없어요. 지난해 7월에 아마존이 인천 데이터센터 건설에 58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것 발표한 것 말고는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데이터 안보 전쟁에 대처하고 있는지, PPT 파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를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밝힌 것들을 보니까요 대만에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 MS와 아마존, 인텔이 투자에 나섰고요.

오픈AI 기업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이정현 위원 오픈AI의 아시아 최초 오피스가 어디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

○이정현 위원 일본 도쿄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일본……

○이정현 위원 예,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은 지금 데이터 굴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마존이 5년 동안 2조 3000억 엔, 20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동안 29억 달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데이터 센터를 일본에 설치하는데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관련 기사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구글도 10억 달러, 오라클이 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데이터 인프라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굴기에 나선 일본을 따라가려면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AI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PPT 한번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2.5배입니다. 물론 인구가 그 이상 2.5배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 다만 이 격차가 2030년이 되면 세계적인 시장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아마 200억 달러 이상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디지털 무역협정은 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모르시지요? 이것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옆에 계실 테니까.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한 것들을, 최근에 과기부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가 과기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최근 5년 동안 디지털 무역협정을 5건 체결했습니다, 우리 과기부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동반자협정, 뉴질랜드·칠레·에콰도르도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이런 큰 나라들과는 데이터 무역협정이 아직 체결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서 데이터 영토 확장을 늘리는 방안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 기업들이 영토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기본법조차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 무역협정을 산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과기부가 참여하는 형식인데 이것도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박충권 위원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를 할 텐데 안 계시네요. 좀 전해 주세요.

일본에도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재난 대비, 재난방송.

김태규 직무대행님!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김우영 위원** 재난 주무 방송이 어디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KBS……

○**김우영 위원** 방통위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종합상황실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 의무사업자는 한 60여 개 된다고 그러네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전부 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거기에 무슨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난방송 감지 시스템이라든가 모니터링, 재난 관련 조기경보를 위해서 2021년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3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김우영 위원** 23년도에 그런 큰 비극이 있었고 22년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22년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 KBS가 재난 주무 방송으로서 사전경보 예비 대응태세를 갖췄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23년도 오송 지하 참사도 우리가 국가의 재난 감지 또 예비시스템이 잘 구축됐더라면 소중한 인명을 지킬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이 8% 삭감됐고 재난방송 운영지원 29.8% 삭감했고 지상파 재난경보서비스 도입 4.3% 삭감했고 재난 속보 지원 예산, 지역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 예산 제로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통부에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23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17.5% 삭감했고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에 16.7% 삭감했어요.

22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23년도에 대부분의 재난 관련 대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재난 관련 R&D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통부가 하고 있는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드론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저한테 질문……

○김우영 위원 정통부장관한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라서……

○김우영 위원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못 받고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제가 간단히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재난 관련해서 드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드론 기술 수준이……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드론 제작 국가가 주로 중국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아무래도 그게 모터, 자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드론이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바람·비·불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소방이나 재난 관련 드론 기술개발을 앞당기면 우리가 드론 관련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드론 관련 기술개발에 엄청난 투자와 R&D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 한번 현황을 말씀해 봐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아까 말씀하신 성층권 드론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을 개발한다기보다도 저희들 성층권에서, 고고도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구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 소방청인가요? 소방본부랑 소방 관련 드론 기술개발 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기부가 좀 해 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저희들이 소방청이랑 직접적으로 드론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해 오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국토부와 UAM이라든가 이런 선도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지금 아까 재난방송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재난방송이 가장 모범적인 게 NHK입니다. 일본의 재난 주무 방송이 NHK인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하냐면 총예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시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추가질의 안 하시면 3분 더 드리겠습니다. 3분 더 드리세요.



○**김우영 위원** 예, 3분.

총예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모의훈련에 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 직원들이 매뉴얼을 갖다 놓고 어떤 방식의 어조와 어떤 멘트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시뮬레이션과 모의훈련을 합니다. 모의훈련하는데 예산을 써야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11년도 대지진이 났을 때 방송사 아나운서의 멘트가 매우 침착했다는 겁니다. 침착하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느끼고 도망을 잘 안 가거나 도망을 갔다가도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매뉴얼이 뭐냐면, 갑자기 경보가 나면 강하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즉시 지금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뛰어가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TV가 있는 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보가 났을 때 강제로 그 TV를 켜게 하는 기술도 개발한다는 겁니다.

진짜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재난 관련 대비를 과학기술 R&D하고 연결해서 또 특히 재난방송 관련해서 다 연결해 가지고 재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투자를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일본을 닮는 길이에요.

일본은 재난 그 자체가 일상이 되는 사회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재난에 대비하고 또 재난에 대한 감수성,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 엄청나게 훈련하고 재정을 투입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면 재난방송 주무 관리 부처로서 올해 어떤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강화할지 의지를 말씀해 봐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원님께서 주신 유용하고 좋은 말씀 굉장히 경청하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빠진 점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과기정통부도 소방청하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해서 재난대응 기술개발이나 대응 시스템에 대한 공조와 공동연구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직 구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마 과기정통부 산하의 연구개발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관련돼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요.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어버드(FireBird)라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화재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그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재난안전 임무를 위한 육해공 드론 개발 사업을 행안부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기획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실에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상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 이상휘입니다.

김우영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여야가 이리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질문드렸습시다마는 드론 관련해서…… 항우연에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항우연 원장님, 드론 관련해서 지금……

○한민수 **위원** 항우연이 아니고 우주항공청.

○이상휘 **위원** 우주항공청. 죄송합니다, 제가 과학적 지식이 짧아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드론 기술 수준이?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은,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드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러면 중국 기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중국이 그런 무인기에 아주 특화된 핵심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국방 관련한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민군 겸용 사업으로 군이 갖고 있는 무인기 기술을 저희가 민에 접목해서 좀 더 확보할……

○이상휘 **위원** 민간 쪽에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이제 산업화된다는 것은 민간 쪽에서 개발하든 아니면 국가 쪽에서 개발하든 똑같다는 거지요, 같이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 목적 기반 드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목적 기반 드론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목적 기반……

○이상휘 **위원** 운송수단이라든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드론이라든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여러 목적의 드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여러, 무인 택배 관련한 드론 그리고 농약 살포 드론 이런 다목적의 그런 드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제가 좀 우매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4명에서 10명까지 실을 수 있는 드론 이 정도 개발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사람을 태우는 기술은 UAM이라고 도심항공모빌리티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게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그게 짧게는 한 50km, 길게는 한 300km 이상에 해당하는 도심 간의 이동수단으로 일종의 나는 자동차, 항공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어떤 큰 사업으로서 AAM이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이상휘 위원**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10년 안에는 그게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상용화까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맞습니다.

○**이상휘 위원** 질문 마치겠는데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시다면 울릉도를 이용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결산 보고를 보면 과기정통부장관님,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 여기가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사업 해서 10개의 AI 대학원에 대해서 대학당 연 20억 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에서는 9개의 AI 융합혁신대학원에 대해서 대학당 연 11억 7000만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일단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 AI 분야의 인력은 1만 3000명가량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R&D 같은 고급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프트웨어, AI 같은 디지털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관련 분야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금 정부의 종합계획으로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AI 분야의 인재와 사업화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메우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당장에 그 인원을 어디서 충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거를 해외 인재의 유치라든가 아니면 또 유학생 활용 또는 여성 과학인들 활용 이런 현실적인 것으로 대체를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거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분야에 필요한 거는 기능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고 가려면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런 면에서 잘못하면 디지털 인재라고 해서 그 포인트가 너무 기능적으로 몰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부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결국에는 인재 싸움인데 예컨대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ODA가 있습니까? 해외에 해 주는 ODA 사업이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교육부나 또 외교부랑 협의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우수한 인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가 보면요 지역에는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농장도 안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뿐 아니라 고급인재들을 ODA의 국가 장학금으로 유치를 해서 같이 키우고 또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정착

해서,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창원 국가산단 내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R&D 센터를 못 만듭니다. 판교 이남으로 인재들이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한 것이 가칭 아세안공학기술원 같은 걸 해서 한·아세안 협력사업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때 양 정상 간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과학기술부·교육부·외교부가 ODA 예산을 투입해서 아세안에서 정말 최고의 공학 인재를 우리가 유치하자,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 AI, 초고도의 제조 AI라든가 또 AI, DX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인력을 쓰자, 이게 지역의 인구는, 지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큰 제조시설들은 수도권에서 먼 남쪽 해안이나 수출하기 좋은 동쪽, 서쪽 해안에 있는데 R&D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법을 국내에서도 길러야겠지만 이제는 우수한 외국인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어제 제가—오늘 아침에 이준석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보스턴 코리아를 이야기 하면서 보스턴 인근에만, 매사추세츠주에만 2000명가량의 최고의 과학인재, 우리 과학인재들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재들의, 외국인 인재들의 유치 때문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이 터무니 없는 인재 수급 문제를 ODA 자금 등을 활용한, 특히 아세안 국가 같은 곳의 최정상급 공학 졸업생들을 대학원 과정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그 인재들을 유치하고 한·아세안 간에 든든한 협력 발판도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그 문제가 저희 과기정통부 혼자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 유학생이나 해외 인재를 지방에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런 환경이 받쳐 줘야 되니까 교육부하고 과기정통부 또는 산업부도 같이 연계가 돼야 돼서 범 부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재를 유입시키고 그거를 분산시킬 수 있느냐,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한번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거를 제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분리징수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예, 그렇게 시행령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어쨌든 했지요. 했지요? 그러면 수신료 관련해서 위탁용역 혹시 의뢰한 거 있나요? 이게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올해 2024년 7월까지 했을 때 수신료 관련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되는지 혹시 용역보고서를 받아 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수신료 분리징수가 올 7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됐고……

**○김현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7월까지 없지요. 그러면 혹시 남아 있지요, 용역보고서를…… 남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작년에 헌법소원 관련된……

○김현 위원 아니, 남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자꾸 섞이지 말고. 남아 있지요? 아직 용역보고서 다 의뢰 안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의뢰라 하시면……

○김현 위원 7월 이후에 한 십여 군데에 여지가 남아 있지요, 아직? 용역보고서 2024년도 다 안 썼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정책연구 말씀하시나 본데……

○김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그거는 정확히는……

○김현 위원 아니요, 방송정책국에서 의뢰할 수 있잖아요, 용역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그러니까 방통위 전체적으로 전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의뢰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고요.

기조국장님 나오세요.

KBS 현직 이사들 5명이서 행정법원에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임명처분취소청구 소송과 함께요. 이 변호사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 이 소송은? 답변서를 준비하려면 KBS 이사인 이인철 변호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충돌이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다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변호사비는 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해처럼 유용해서 또 쓰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필요하면 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전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2023회계연도 방통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 계약을 1000만 원 쓴 게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소견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불법행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소송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사용이 되고요. 일반수용비 안에서 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전용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변호사비 남발로 인해서 지금 돈을 다 썼던 것 아닙니까? 돈을 다 썼잖아요. 제가 아까도, 행정청이 심의·결재를 제대로 안 하면서 지금 법원의 재판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년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기획조정관님이 하고 계시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위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던, 방송정책국장한테 얘기했던 게 수신료 관련 위탁용역보고서가 2008년도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래 1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KBS 분리징수가 틀리다, 통합징수가 맞다라고 해서 용역보고서 결과 나온 게 대략 한 16건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분리징수를 올 7월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KBS 결산을 할 텐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분리징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다라는 용역 보고서가 나와야지 지금 용산에서 하는 정책이 맞는 거고 그것을 이행한 방통위의,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이 불법하다라고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직권남용이 될지 직무유기가 될 지는 다뤄 보겠지만 직권남용의 경우는 향후 7년 동안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시행령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 또는 그것이 아니라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탁기관을 공개적으로 경쟁계약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수신료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 2023년도에 보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 27건을 했고 그다음에 급작스럽게 10건을 불과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을 두고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기간 9월부터 12월 안에 아마 용역보고서를 아직까지 다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내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용역보고서를 맡겨 주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용역비가 남아 있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되고요.

○김현 위원 남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하여튼 그 부분은 직무대행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김현 위원 본안에서 다투라고 그런 거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PPT 띄워 주세요.

5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종면 위원님이 안 계시고 김장겸 위원님도 안 계신데 이게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흐름을 조금 더 보려고 2018년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2018년에는 무려 총 이용자 정보조회가 640만인데 이게 아마 5년까지만 검찰·경찰·국정원 등등이 분류될 수 있나 봐요.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쪽 보시면 검경이 가장 많고요, 2018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를 했고 검경이 적폐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도 이용자 정보조회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았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적폐 수사 결과인데 그러면 그때 검찰의 적폐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냐,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검장을 했고요. 검찰총장

을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시의 지검장을 비난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그때 적폐청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찰이 누구의 정보를 조회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줄었고, 이건 아마도 대선 기간 접어들고 2022년 줄었습니다. 선거기간이었는데, 여기서 좀 더 긴장해야 될 것은 2023년에 다시 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도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간 수사기관별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같은 것은 이 자체 숫자는 중립적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를 가리키고 누구를 주로 많이 조회했고는 이후에 조금 더 분석을 하고 그 방향이 정말 정파적이었느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시정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노종면 위원님과 김장겸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발언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대통령께서 과방위의 청문회라든가 과방위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걱정할 만하지요. 대한민국에서 방통위원회가 생긴 게 2008년 초인데요, 그게 이명박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이 마무리를 한 것,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이 마무리한 것이고요. 그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됐기 때문에 방통위원회 설립이 역사적 흐름이었고, 이 자리에는 그때 저와 같이 그 방통 융합을 추진한 실무자들이 성장해서 국장도 되고 그렇게 와 계십니다. 잘 알아요, 서로 이 사안을.

그러면 방통위원회가 왜 이런 호소를 하게 됐냐.

MB 때는 최시중 위원장이 죽 가서 방통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유능한 분이셨어요, 입장은 다르지만,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경재 위원장 그리고 최성준 위원장이 오셨는데, 이경재 위원장님 워낙 능통하신 분이었고 최성준 위원장은 판사셨는데 매우매우 중립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자주 바뀌게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최시중 위원장이라든가 이경재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이 왔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방위나 다른 부처, 원안위도 그렇고 우주항공청도 그렇고 항공청도 그렇고 되게 안정돼 있습니다. 일단 항공청장님은 전문가구나 이게 느껴지고, 과기부장관님도 그쪽의 전문가시고 차관도 두 분이 아주 안정되게 뒷받침을 하시니까 질문에 답을 하실 때 굉장히 안심이 되고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를 3차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답변도 방통위에 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도 사무처장이라도 이걸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이런 답변을 안 해서 길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방통위에도 저는 같이 일해 본 분들이 많고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일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매우매우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방통위원 인사를 제대로 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데 의기 투합하면 옛날의 유능했던 방통위로, 유능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통위원을 유능한 분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추가질의 하시면 또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하십시오.

○**김현 위원**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실무자들한테 한다는 점을 양해를 바라는데, 하나만 그래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시 통합미디어법 들어 보셨지요?

마이크 제대로 놓으세요. 마이크 제대로 놓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김현 위원** 통합미디어법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김현 위원** 그게 혹시 그 직전에는 어떤 법령이었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이현 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 원래 통합미디어법이 언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또 모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제 소관은 아니지만 원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소관이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이현** 현재는 기획조정관 쪽에서……

○**김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나오세요.

방송정책과 관련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제정하자라고 3년 넘게 논의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지난 정부에서 계속……

○**김현 위원** 직전에 방송정책국장 하면서도 같이 함께 논의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 이것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법령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김현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과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서 하자는 의미로 통합 법제를 쓴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왜냐하면 OTT하고, 지상파 방송하고 공영방송하고 OTT 등 해서 콘텐츠, 많이 바뀐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고 해서 이것 용역 주고, 이 법을 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공청회 그다음에 심지어 상임위원들한테 보고까지 됐던 거잖아요? 당시 안형환, 김효재 위원 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통합미디어법이라는 형식을 바꾼, 실질적으



로 내용은 유사할 것 같은데……

아마 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 달에 법을 제정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부지하세월이지요, 지금? 방통위에서 이걸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지금 상황이 물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용역보고서 혹시 맡겼습니까? 아까 질문의 연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김현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바뀌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일단 올해는 연구반을 구성해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통합미디어법으로 바꾸는데 지금 연구반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름부터 바뀌요? 그것 너무 졸속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통합 법제라는 명칭은 그 이전부터 썼던 것 같고요.

○**김현 위원** 아니, 통합 법제를 쓰더라도 시청각미디어법으로 형식을 바꾼 이유가 다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조실장님?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

○**김현 위원** 얼마 주는지 아세요? 2억 줘요, 2억.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스무여 군데 2억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번 결산 심사할 때 자세히 따져 묻겠지만 방통위에서 용역보고서 1건 당 5000~6000이에요. 그리고 지난 23년도에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맡긴 게 10건이고 제목 유사한 것, 내용 유사한 것 수두룩하게 많습시다. 정작 해야 될 곳, 정작 지원해야 될 곳은 아주 냉정하게 잘라 버리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대로 가거나 하고 이런 용역연구비, 정책개발비 다 그대로 하는데 16년 동안 방통위가 오면서 제목 바꿔 가지고 보고서 나온 것 많이 있지요. 그 사이에 우리가 따져 묻지 않아서 그런 거지만 그냥 눈감고 용인해 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통합미디어법이라는 이름이 바뀌지게 된 배경, 과정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직무대행에게 보고를 좀 하십시오. 왜 바꿨는지 내일 와서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형식의, 예를 들어서 온라인플랫폼이용자서비스법, 디지털 플랫폼이용자서비스법 이게 온라인이냐 디지털이냐, 법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냐에 결정적 영향을 좌우했었던 거거든요.

아시지요, 그것?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통합미디어 법을 바꾸게 된 배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김영관 예.

○김현 위원 직무대행님, 이제 또 답변서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 보시고 답변서 제출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무슨……

○김현 위원 KBS 현재 이사들이 지금 소송을 하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거야 소송대리인들이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인철 변호사한테 시킬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변론 과정 중에 알아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이것 다 결산하고 예산과 연동되는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연동돼도……

○김현 위원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이 그냥 하고 싶은 것……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위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위반 없이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말 끼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끼어들어서 엉키지 말라고 애기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답변서 보고 제출하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어찌 보면……

○김현 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그러십시오.

○김현 위원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한 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한 달이 안 됐지요? 그런데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보고 받느라고 힘드시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청문회 하느라고 그다음에 이사들 임명하느라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기본적인 것은 한번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스크린만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이상 어찌 하겠습니까?

○김현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통합미디어법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었는데 그 명칭이 돌연……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그 이전 명칭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김현 위원 그 태도부터 바꾸세요. 안 그러면, 태도 지적하면……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질문 태도를 좀 잘해 주시면 답변 태도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직무대행님.

이것 세우세요.

○김현 위원 지금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아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아니, 지금 그것은……

○김현 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질문하시는 태도도 그렇게……

○김현 위원 설명한다고 얘기했어요, 질문하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김현 위원 설명을 들으셔도 돼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방통위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질문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상혁 위원장 쫓아내고 방통위 직원들 30명가량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고 있는 피로와 업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청의 책임자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와 그 직위에 있을 때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신상발언 5분 드리세요. 5분 발언 드리세요.

○김현 위원 지금 박정훈 위원이 없어서…… 제가 오늘 중간에 얘기를 안 한 것은 중간에 회의가 또 그것을 빌미로 파행이 나거나 정회가 날 것을 우려해서 제가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렇게 내색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한 거니까요.

○김장겸 위원 아니, 신상발언 하시는데 남의 이름을 왜 거론해요?

○김현 위원 제 신상발언입니다. 거론해도 돼요.

○김장겸 위원 제가 어쨌다고?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되게 불쾌한 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상발언합니다.

○김장겸 위원 불쾌한 표정은 평소 김현 위원이 더 해요.

○김현 위원 토론하는 시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 사람을 가지고 놀아 버려요, 지금?

○김현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겸 위원 박정훈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만한 거예요. 알아요?

○김현 위원 조심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조심해요!

○김현 위원 조심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김장겸 위원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어디 있어요?

○김현 위원 함부로 명예훼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장겸 위원 명예훼손?

○김현 위원 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상발언하는 시간이고 끼어들지 마세요.

○김장겸 위원 아니, 참다참다 아까 박정훈 위원 이야기할 때 내가 김현 위원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대리기사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몰염치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리기사가 직접 얘기한 게 싱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보도됐습니다.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도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폭행을 당하는 대리기사에게 반말로 제가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정적인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 불러 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니까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때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분들이 폭행을 가했다. 그게 잘한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리기사 불러 놓고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 9월 15일 11시 55분부터 9월 16일 새벽 12시 10분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그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의한 정치공작에 의한 피해자고 희생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폭행을 당하는 사람한테 반말을 지껄었다라는 이런 왜곡 보도를 어떻게 그냥 듣고, 그것은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장겸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반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바로 눈에 보인,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김장겸 위원** 평소에 김현 위원이 10배는 더 해요!

○**김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박정훈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김장겸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저를 거론하느냐고.

○**김현 위원** 왜 대꾸를 하십니까? 안 끼면 되지요.

○**김장겸 위원** 아니,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뭐예요? 오만방자하게 진짜, 간사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다 얘기하시지요.

○**김현 위원** 이상 저는요 어쨌든 박정훈 위원이 제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기회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김장겸 위원** 아니, 해도해도 너무 하잖아요.

○**위원장 최민희**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현 위원의 대리기사 관련 의혹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대리기사가 증언했다는 많은 것들이 법원에서 탄핵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 위원이, 오늘 박정훈 위원이 지금 안 계셔서 저희가 얘기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 제기한 저 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박정훈 위원과, 내일 박정훈 위원이 출석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김장겸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죄 안 짓도록 해’, ‘사면 겨우 받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김현 위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김장겸 위원** 그런 이야기 비슷한 취지로……

○**김현 위원** 저는 하나도 한 적 없습니다. 사면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요.

○**김장겸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김현 위원** 보십시오. 저는 김장겸 위원의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제 머릿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김장겸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속기록을 찾아서 보내 드릴게요.

○**김현 위원** 가져오십시오.

○**김장겸 위원** 우리 보좌진이 찾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비아냥거림을 하신 분이, 내가 아까 박정훈 위원 발언할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평소에 비아냥거리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요……

○**김현 위원** 그 발언 되게 모독이에요.

○김장겸 위원 지금 말 자꾸 끼어드는 것 이것……

○김현 위원 아까도 끼어드셨어요.

○김장겸 위원 이건 아주 버릇이야, 버릇!

○김현 위원 아까도 끼어드셨어요, 더 많이.

○이상휘 위원 좀 대충 합시다!

○김현 위원 김장겸 위원님께서 더 많이 끼어들었다고요.

○김장겸 위원 지금 뭐예요? 아까 간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김현 위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간사면 그럴 수 있다고?

○김장겸 위원 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박정훈 위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현 위원 김장겸 위원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김장겸 위원 정말 너무하네.

이런 수준의 과방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김현 위원 수준이 어떤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이게……

○최형두 위원 이제 그만합시다.

○김장겸 위원 야, 정말 창피스럽네, 창피스러워.

그만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법 제8장 120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는 워낙 정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만든 것이기도 한데, 국무위원들께서 같이 끼어드시면 정말 위원장은 질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8장 120조는 꼭 엄두에 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속기록 찾았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김현 위원 예, 읽어 주세요, 언제인지.

○조인철 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최민희 일단 오늘은 국무위원들 계시니까……

○김장겸 위원 평소 합리적인 조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참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오늘 노종면 위원, 박민규 위원, 신성범 위원, 이상휘 위원, 이준석 위원, 이정현 위원,

이훈기 위원, 이해민 위원, 최민희 위원, 최형두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현안질의와 KBS·EBS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20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민규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수진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연구개발정책실장 황판식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임요업  
정책기획관 송재성  
국제협력관 황성훈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권현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이창선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창림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진흥정책관 최준호  
 전파정책국장 최병택  
 과학기술정책국장직무대리 윤성훈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조선학  
 성과평가정책국장 이상윤  
 대변인 조낙현  
 감사관 김정기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조해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사무처장 조성은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박동주  
 시장조사심의관 반상권  
 대변인 신영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사무처장 임승철  
 기획조정관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존리  
 기획조정관 이재형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8월 26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 8. 23.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2)

8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 8. 7.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2)

8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